

第256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0 號

國會事務處

2005年10月28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附議된案件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 1
- o 5분자유발언 ..... 77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10시0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의 날 기념 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차관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의장이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鶴松 議員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1만 9000통의 이력서를

내고도 취업을 하지 못했던 한 젊은이가 하루에도 수백 번 자살을 생각한다는 기사를 보고 비록 야당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그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무려 3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에 1만 2000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이 들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유당 시절, 독재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못 살겠다. 갈아 보자”라는 구호로 정권을 갈아치웠습니다. 집권 3년 만에 경제 파탄과 국가 정체성 위기를 초래한 참여정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은 “못 참겠다. 바꿔 보자”는 심정으로 선거 때마다 심판을 내렸고 이번 재선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참여정부는 국가의 본분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잃었던 정부의 정책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고속도로 부지는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건설비의 절반은 국가가, 나머지의 절반은 도로공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계산할 때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 건설비와 고속도로 부지 매입비까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설비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과 또 기존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통행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속도로 부지는 영원히 소멸하지도 않고, 현재 국가의 소유로 또 등재되어 있고, 남기 때문에 이것을 통행료에 가산하는 것은 국민의 이중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속도로 부지 매입비 4조 7312억 원에 해당하는 통행료 원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오히려 10%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건설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법제화해 놓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용지비도 당연히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용지비를 통행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국유 여부는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고, 비용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金鶴松 議員** 지금 현재 고속도로 부지 매입비가 4조 정도 들었다면, 지금 이게 정부 재산으로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 쪽으로도 등기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중으로 도로공사에도 자본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양쪽으로 다 잡혀도 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이러한 국유 여부 자체는 누가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고요, 고속도로 통행료라는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통행자에게 부담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유료도로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鶴松 議員** 이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수돗

물 값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댐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부지 매입비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부지 매입비 5359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수돗물 값도 지금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총리와 저하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례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속철도의 경우는 부지 매입비는 물론 정부 출자 전액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나 하면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7조 7768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중에서 정부 예산 3조 1024억 원은 전액 고속철도시설관리권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도로공사하고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고속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도로에 관해서는 분명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통행료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부총리, 또 제가 묻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경우에는 처음에는 공항시설 가치가 3조 2231억 원이라고 출자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까 공사 출범 이후 2년 만에 이 가치를 10분의 1 정도 되는 343억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2년 3월, 200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가 총 4조 4772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1, 2차 출자 시에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평균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권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원가법과 수익환원법 2개를 비교 검토해서 미래의 수익가치에 의한 수익환원법보다는 원가법이 출자 당시의 자산가치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회계 처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마는—에서는 수익환원법, 다시 말씀드리면 장래의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수익환원법이 회계처리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 의견을 수용해서 1, 2차 때 출자된 관리권을 원가법에서 수익환원법으로 재평가함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변동을 했기 때문에 결손 처리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어떤 것은 원가법, 어떤 것은 수익환원법, 도대체 정부가 하는 것이 이현령비현령입니다.

지금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이중으로 잡아 국민세금을 부담시키고 또 어떤 것은 아예 출자에서 빼 버리고 또 10분의 1로 줄여 버리고, 도대체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는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공공요금은 국가 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급증하고 있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하고, 또 저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을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에서 각 부처와 협의해서 기준과 원칙을 좀 정해 주도록 하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처장관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국정감사를 다섯 번이나 하면서, 우리 정부 산하의 공기업에 관한 도덕적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공히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 사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임금협상이 보통 4월, 5

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춘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공기업에서 임금협상은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마무리를 짓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가급적 상반기에 마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노사 자율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金鶴松 議員** 그런데 그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서 옛날에 조금 앞에 당기는 문제, 조금 앞쪽으로 하면 인센티브…… 경영평가 점수에도 좀 반응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노사자율 협상하는 데 오히려 사측 내지 노측에 불리한 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즘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金鶴松 議員** 임금협상 시작은 4월달 내지 5월달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4월이나 5월에 시작해서 저희들 국정감사가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다수의 공기업들은 임금협상을 10월달 이전에 끝내지를 않습니다.

왜? 국정감사에서 임금을 많이 인상을 하게 되면 질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인 협상을 해서 임금 인상을 11월달 내지 12월달에 결정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金鶴松 議員**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다음 1년 뒤에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합의라는 그 자율성에 의해서 정부 가이드라인보다는 무려 배 이상 높게 임금을 연말에 결정을 합니다.

연말에 임금을 결정하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를 소급 적용받아서 연말에 보통 한 사람에 수천만 원씩 봉급을 더 받아 갑니다. 이것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마는, 그게 지금 근로기준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기본권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개입은 못 합니다마는, 사후적으로 임금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침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이번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영평가 같

은 것 할 때 보수 측면이라든지 임금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평가를 할 때 한 5점, 6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한 10점 정도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있으면 사장이라든지 비상임이사라든지 임원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하는 방식을 좀 취하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도 자체를 갖다가 예산처에서 좀 바꾸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예.

○**金鶴松 議員** 그리고 지시를 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그래서 해임도 건의를 좀 하겠고, 지금 금년 한 11월부터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상태를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서 포털사이트를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다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좀 할 것이고, 그다음 또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안의 내부적인 통제 이런 게 가능하도록 12월까지, 금년 말까지 그것을 계획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공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다 높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관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金鶴松 議員** 01년도에 관광공사가 18.1%, 02년도에는 석유공사가 23.8%, 03년도에는 토지공사가 15.4%, 04년도에는 수자원공사가 14.32%, 이런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예산처장관이 주도를 해서 상반기에 임금협상 마무리를 짓고 지나친 임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해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농해수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95년도 수산업법 개정 시에 금지시켰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金鶴松 議員** 해수부 산하기관 국립수산물과학원 홈페이지에 금년 10월 초까지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을 권장해 왔는데도 그래도 금지시켰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예,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95년도부터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업인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상당히 소홀했다는 부분을 사실대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鶴松 議員** 그리고 지난 9월 23일 해수부 국감 시에는 국내산은 안전하다고 국정감사에서 말을 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안전하다고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마는, 9월 1일 활뱀장어에 대하여 “중국산 수입 활뱀장어에서는 검출되었지만 우리 수산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뱀장어는 안전합니다.” 하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金鶴松 議員** 장관, 말라카이트 그린은 발암물질로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화공약품입니다.

그런데 9월 23일 해수부 국감 시하고 10월 10일 해수부 국감에서 장관의 말이 달라지니까 농해수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위증죄로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그러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9월 23일 국감 시까지는 한두 건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위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金鶴松 議員** 이것은 회의록,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말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장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내가 갈따구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갈따구 문제라 하니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갈따구가 새냐고 물었습니다. 갈따구는 해충입니다.

지난 5월 12일 진해 시민들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바다파리, 갈따구 등 해충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해수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비춰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갈따구 사체가 지금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다. 이것은 물가의 깔따구를 포크레인으로 건져 올린 것입니다. 지금 195만 평 투기장 안에는 아마 엄청난 사체가 썩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깔따구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은 깔따구와 바다파리 떼가 투기장 위를 지금 현재 뒤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여름에는 경남·부산 일대의 제비란 제비, 잠자리란 잠자리가 다 모여서 깔따구 잡는다고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었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인근 횡집 수족관에는 깔따구 떼가 지금 수북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다음 사진은 깔따구와 바다파리로 생긴 피부병으로 아이의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녁 무렵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깔따구 떼가 천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온 동네는 물론 산, 가로등, 차량 등……

지금 현재 거미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제비, 잠자리는 사라지고 온갖 철새 떼들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깔따구 사체, 또 시꺼멓게 썩은 물, 방제 약품이 한데 어우러져서 방류구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지금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직접 현장에 기사를 동반하고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저히 악취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악취 때문에 지금 현재 진해 주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13일 방문하고 난 뒤에 해수부에 요구를 하니, 17일 차관이 온다고 하니 10월 16일, 하루 전날 현장을 은폐하는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밑으로는 썩은 물들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진, 깔따구 떼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니 이놈들이 매일 저녁이면 단체로 하늘로 용오름을 했다가 불빛이 비치는 마을을 습격합니다.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좀 보시지요.

(10시2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0분 동영상 상영종료)

장관,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그 지역의 애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미 보고를 받고 그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金鶴松 議員** 지금 현재 진해 시민들은 개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시작된 문제가 8월 19일 본 의원이 간담회를 주최했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극심할 때까지 해수부는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방제 대책을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해수부가 방치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8월부터 우리 해양수산부 국·과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도 대화를 해 나가면서 방제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준설토 투기장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고 이러한 피해가 나오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가장 초기의 조치는 오리를 갖다가 대량 방류를 해서 천적을 활용하는 방법을 시행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약품을 살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준설토 투기장의 경우에는 약품 살포를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한데 요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례가 없는 아주 특별한 확산을 보이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래서 현장에 전문가들, 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들도 함께 나가고 환경청에서도 함께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보고 내린 결론은 첫 번째로 우선 방제 약품을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방제 약품을 일찍이부터 살포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적기에 살포하지 못했고, 다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1·2공구에 대해서 약품을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포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지금도 주민대표들과 대책위원

회를 만들어 가지고 약품을 살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金鶴松 議員** 장관, 8월 23일 해수부에서 대책 회의를 해서 성장억제제를 뿌리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8월 말까지 성장억제제는 인간에게도 해롭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갈따구 해충이 너무나 극심해지자 제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정부를 믿고 성장억제제를 뿌려 보자 그래서 1·2공구에 2300kg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약을 뿌리면 보름이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9월 초부터 성장억제제를 2300kg이나 1·2공구에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10월에는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용오름까지 오르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책이 효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약품을 살포할 때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포를 하려고 하는 이 약품은 WHO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약제이고 미국 환경청의 허가 등 국제적으로도 인증된 약품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식약청의 엄격한 기준과 시험을 거쳐서 방역용으로 수입·허가가 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이 약제에 대한 위해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데 전반에 약제를 살포했을 때 전체 195만 평입니다만, 전체를 다 살포했으면 확실한 효과가 났을 텐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1~2블록 정도 그러니까 30만 평 정도밖에 이 약제를 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약제를 살포한 지역에는 물가파리가 743개 개체에서 62개 개체로 줄었고 갈따구의 경우에도 352개 개체에서 202개 개체로 줄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전체에 살포했다면 더 좋은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었지 않

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金鶴松 議員** 장관의 생각과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은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지금 주민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긴밀히 주민들과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주민대책협의회에는 관련 중앙부처가 다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 환경부도 함께 포함되고 지역에서도 지역의 환경단체까지 같이 포함하는 이러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동 중에 있고 현재는 상당히 전향적인 분위기에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해답을 제시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그러면 영구적인 방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金鶴松 議員**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내년도가 크게 염려가 됩니다. 금년의 경우는 이제 거의 11월 말에 가까워지니까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부터 갈따구가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가 문제니까 금년도에 우선 1차 약제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2차 방제를 해서 앞으로 3회 정도의 방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복토를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2007년도 중순쯤에 복토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조금 더 앞당겨 가지고 빠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 복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어떻게 금년 말이나 내년에 복토가 됩니까? 지금 준설토 투기장은 자연 퇴적 시간이 전부 3년이 걸리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내년 말부터 복토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金鶴松 議員** 내년 말부터 복토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지금 물을 빨리 뺄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복토를 하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다 해 봤습

니다. 내년 말에 복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복토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협의회와 논의를 할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현재 갈따구 떼는 투기장 근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해시민의 희생과 고통 위에서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내년 1월 일부 개항을 앞두고 명칭 문제와 행정구역 확장 문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KTX 천안-아산역, 평택-당진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양 지자체 사이에 건설되는 시설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양 지역명을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해수부 차관은 9월 14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서 ‘부산신항’이 되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부산 편을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해수부가 부산 편을 든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토록 편파적인 해수부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맡겨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사업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조금 전에 보신 화면의 소감이 어떠십니까, 총리?

○**국무총리 이해찬** 예, 화면에서도 봤고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투기장에 벌레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봤는데 해충 피해 대책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투입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도록 하고 대책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지금 해수부는 예산도 없이 방제약품 대금 그리고 방제 대금 이러한 부분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확인을 좀 하셔서 가지고 항구적인 방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지금 현재 신항만 명칭에 대해서 항만법시행령에 부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과 당진의 싸움이 치열해 지자 해수부는 04년 12월 30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부산하고 진해 사이에 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들을 계속 하고 계셔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위원회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의 시행령상으로는 부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할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할지는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1월에 3선석이 개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지금 진해의 민심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해 주셔서 명칭 결정을 해주시기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鶴松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참여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렵고 복잡한 말 백마디도 아닙니다. 흩어진 우리의 저력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신뢰로 뽕뽕 뭉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저의 대정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김학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저출산·고령화 문제’입니다.

모든 사회 변동의 밑바닥에는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년 전 경제학자 맬더스는 인구 증가와 식량 증산의 속도 차이가 필연적으로 대기근과 전쟁 같은 사회적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빗나간 예언으로 세계를 불안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라는 정반대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학자 폴 윌리스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른바 쓰나미를 능가한다는 인구 지진입니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2002년도에 고령화 회의에서 고령화를 가리켜 세계의 시한폭탄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 전례 없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보통 축복으로 간주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필연적으로 몰고 올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21세기 지구촌을 위협하는 이 시한폭탄의 첫 희생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인구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잠깐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우리 사회의 인구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03년부터 가임 여성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생산 가

능 인구가 2016년도부터 감소하고 2018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2020년에는 노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능가하는 대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가게 됩니다. 2050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출산율의 저하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함께 출산율 변동 추이입니다. 이것이 가임 여성이 낳는 아이의 숫자인데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서 지금 1.16으로 지난해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함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이나 OECD 평균은 물론이고, 영국 미국 프랑스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 고령화 속도는 세계 인구 변화의 관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인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왼쪽의 열은 색깔의 막대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기간이고, 짙은 색깔로 된 것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경제 성장도 압축적으로 했지만 고령화 현상도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유년 인가와 노령 인구를 비교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좀더 뚜렷이 알 수 있는데 지금 인구 대역전 현상을 2020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 유년 인가와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가위 모양으로 교차하면서 2050년에는 굉장히 늙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표는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으로 나누어 본 것인데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 본다면 50세가 딱 중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있습니다만, 조만간 2050년에는 절반이 50세 이상으로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출산이 어떤 영향을 몰고 오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미 예측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것이 부양 부담의 급증입니다. 노인 한 분을 우리가 돌보는 데 현재는 여덟 사람의 생산 가능 인구가 한 사람의 노인을 돌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네 사람이 한 분의



어르신을 돌보아 드려야 되고, 2050년이 되면 어르신 한 사람에게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한 전문가들의 여러 예측을 표 하나로 묶어 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의 위기 구조인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세대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노동력이 감소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공적 연금의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국가재정 수지도 악화되고, 또 그럴수록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폭증하게 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맺게 된다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우리 앞에 어떤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정부는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우리 국민경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런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런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단순히 실물경제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자산의 운용에 대한 금융기법, 또 우리 사회 전체의 생산성, 노동 그리고 저축, 이런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현상으로 보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경제현상으로 보고요, 부총리께서는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그러한 양육의 비

용, 그리고 직장에 대한 선호는 높아 가는 데 비해서 직장과 가사를 양립시킬 수 있는 데 드는 이중부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업의 어려움이라든지 고용불안 이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 질문 자료 16쪽에 있는 한국인구학회, 한국여성개발원 등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출산율 감소가 단순한 사회현상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현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 낳을 계획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제일 큰 이유를 자녀 양육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출산율의 저하가 경제적인 현상이라면 정부는 자녀를 낳는 것이 경제적으로 덜 손해가 되도록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정부가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서 의도적으로든 혹은 이미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이든 간에, 새로운 것이든 예로부터 해 오던 것이든 간에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조세를 통한 자녀에 대한 각종 공제 이런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전에는 그러한 데 대한 인식이 그렇게 크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공제 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는 출산과 보육에 관련된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녀를 가진 분과 가지지 않은 분 간의 공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러한 어려운 점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적용하는 세제 혜택은 소득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한테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근로자의 반 정도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더 이러한 제도를 출산과 직결되는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 보조금도 좋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을, 독신자와 4

인 가족 간에 비슷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본 자료인데요, OECD 자료입니다.

OECD 평균이 독신자와 4인 가족 간의 순조세 부담률 격차가 1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서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자리잡기 시작한 지가 이미 20여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거의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온 결과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보조금도 좋습니다만, 세제상에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를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제개혁 방안에서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제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시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직접세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세제 혜택을 드려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직접 양육보조금제도를 도입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해서 어떤 수준의 지원을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사회안전망과 저출산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조달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기존 세출을 구조조정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존 약 18조에 이르는 각종 조세 감면을 좀더 합리화해서 현 단계에서 불필요한 조세 감면을 철폐함으로써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재원의 발굴이 있겠는지도 방안을 같이 열어 놓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정확히 각 분야별로 어떻게 재원 조달이 되겠는지 하는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이러한 대책에 대한 규모

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 목적세 신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일본 같은 경우가…… 그저께인가요, 아마 여당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사회복지 이런 쪽을 구체적으로 세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정책을 논의하고 거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이러한 세제의 기본적인 논리는 이러한 목적세를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 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출산 장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가 발전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 검토해서 대책을 만약 발표하신다면 언제쯤으로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지금 구체적인 시점은 좀더 정부 안에서, 또 필요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의원** 제가 지금 보육 문제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제부총리께 보육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 이게 재경부 소관이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표입니다.

우리가 통념상으로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자꾸 하면 애를 안 낳는다 이런 게 통념인데요, 놀랍게도 이 OECD의 자료를 보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이 플러스 정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회귀분석입니다—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과관계는 아니지요. 이것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글썄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종의 리그레션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과관계를 딱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여러 가지 보육을 포함한 이런 직장가사를 양립

할 수 있는 제도가 됐기 때문에 또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의 완비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의원**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매우 중요한 동시에, 또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몹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거든요.

유엔의 여러 관련 단체나 기구나 이런 데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결국 보육시설을 사회가 얼마나 잘 갖춰 주느냐에 따라서 여성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느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또 아이를 낳느냐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우리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이 마음 놓고 낳으십시오. 정부가 키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나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시고 또 얼마나 큰 진전이 앞으로 있을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정부는 이러한 고령화와 관련된 또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저출산의 해결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두 개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결국 보육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보육에 대한 재정의 투자, 이것은 말하자면 경제적인 투자의 하나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이 보육에 대한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러한 재정과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가면서 동시에 민간 자본도 이쪽 보육 기능에 투입이 되도록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하고 제도적 개혁도 같이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 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여성부장관의 일이 아니고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주로 경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보다 좀더 진취적인 자세로 세제 면이든 보조금이든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께서 기초연금제 법안을 아마 지난해에 내셨지요? 그렇게 냈을 겁니다. 그리고 일찍이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 후보께서 기초연금을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현행 국민연금의 대규모 사각지대의 존재를 생각할 때 기초연금제라는 이 제도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여쭙어 보는 것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이 제도들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적인 소견에서 한번 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모셨는데요, 우선 그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것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소득비례 부분하고 균등연금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균등연금은 무기여, 무각출로 그냥 일정 연세가 되신 분들께 다 드리는 것이고요, 보험료 7%를 납부하는 소득비례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상응해서, 기여한 만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모든 어르신들한테 돈을 다 풍족히 드리면 좋을 텐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지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죽 올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한나라당의 이 기초연금제 제안을 실현할 경우에 정부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고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 놓았습니다.

**○유시민 의원** 답변을 주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지금 한나라당이 추계한 것하고 조금…… 국민연금공단의 공식적인 발표라기보다 아직은 내부 자료인데 상당한 금액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 제가 보여 드릴까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지요.

기초연금 소요재정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6년도부터 실시한다면 당장 순증가액이 8조 원 정도 되고요, 즉 이렇게 고령화와 더불어서 나중에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총 비용도 2006년도에는 1.1%로 시작해서 2050년에 가면 7.6%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처장관의 입장에서 만약 2006년부터 실시한다면 8조 원 정도의 순증이 예상되고 동시에 한나라당에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9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준비 중인데 2개를 한꺼번에 우리 국회에서 의결해서 보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우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감세안, 그 경우에 따라서는 9조 원 정도이고 또 재정부 추정이나 이런 데는 한 12조 원, 약 10조 원 정도의 감세안을 논의할 때, 지금 사실 조세 기능 측면에서 계속 논의가 됩니다. 경기 조절에 도움이 되느냐, 형평이 있느냐, 혜택 계층이 어디냐 하는데…… 또 지출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첫째로는 지원 예산의 굉장한 삭감이 필요합니다, 감세안만 가지고도.

내년도 일반회계가 약 11조 원 정도 증가합니다. 그것이 국채를 9조 원 발행해서 11조 원 정도가 증가하는데 그중에 삭감할 수 없는 거의 법적인 것 내지 경직성 경비가 한 7, 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성 경비, 그러니까 그 사업을 안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삭감할 수 있는 경비가 3, 4조 정도, 그런데 그게 대부분 R&D나 복지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이 또 세금을 깎으면, 국세는 40% 정도가 지방행정과 교육재정에 전부 다 자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조 원 정도의 세금 삭감을 하면 약 4조 원 정도가 지방의 교육재정 내지 지방재정에서 자동적으로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출 축소를 안 하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에서 15% 정도의 조세 부담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멕시코입니다. 그렇게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바람에 멕시코는 GDP 대비 한 260% 정도의 적자를 유

지하고 일본은 160% 정도의 적자를 유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세 삭감 문제는 내년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지출축소 내지 재정 확대의 문제를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금년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당장 지출된다면 추가 지출이 8조 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실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니깐, 감세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당장 지출 문제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유시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낸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법도 동시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정책토론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싸움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것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16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제출했는데 심의 없이 폐기가 되었고, 17대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을 88년도에 도입할 적에 정상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3%의 보험료를 내면 70%의 급여를 준다고 하는 전혀 이치에 안 맞는 구조로 도입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는 국민들한테 부담은 더 주고 복지는 줄이는 이것에 손을 안 대려고 하다 보니까 죽 손을 안 대고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서 내려왔지요. 그러다가 98년도에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정상적인 제도가 아니고 2030년대나 이쯤 가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출했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수급료는 내리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든 법을 개정해서 하든 고쳐야 되는데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니 개혁특위에서 이번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시민 의원**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제안했던 기초연금제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발의하신 기초연금제법을 보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그다음에 납부 예외자 등등의 사각지대를 한꺼번에 짝 없앤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제도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그 재정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원래 연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내고 본인이 수령해 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 본인들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하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명목상으로는 연금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적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연금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지는데, 기초연금을 주어서 모든 노인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의도가 좋지만 결국은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한 8조 또 누적적으로 가서는 나중에 수십조까지 가게 되는 부담은 국가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담입니다.

○**유시민 의원** 그런데 국민연금법을 특위에서 하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경로연금제도, 지금 73세 이상의 어려운 분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고, 제가 최근에 효도연금제라고 해서 연간 약 100만 명 규모로 일정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혼자 힘으로 노령을 헤쳐 나갈 수 없는 분들에게 대해서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효도연금제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기초연금이든 효도연금이든

결국은 노인분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결국은 재원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 이 수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사실 경제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말하자면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기여를 많이 했고 이제 65세가 되었는데 사회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많지 않은 이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 혹은 보답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금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의원** 제가 효도연금제를 고안하게 된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바, 강조하는 바 또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동의하는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도입한다면 월 6만 원씩 시작해서 2011년까지 10만 원 수준으로 해마다 1만 원씩 올리고, 당장 시작할 때 약 3000억 정도의 추가재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시민 의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는 여야가 있어서 늘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무엇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싸움은 그동안 좀 나쁜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도의 실체를 놔두고 자꾸 서로 간에 정략적으로 공격한 것이 이토록 오래 끌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인구 감소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시고 아이들 많이 낳고 잘 키우는 이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수는 축복이지만 소득 없는 노후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유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正一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해남·진도 출신 민주당 이정일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근본이 되었던 농·어업은 무차별한 수입 농산물과 정부 당국의 정책적 홀대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민은 과연 미래의 청사진이 있는 것인지, 미래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여기에 대한 답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2004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6%입니다. 수산물 자급률은 64%, 소고기 자급률은 44%, 목재 자급률은 23%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두 끼 식사는 수입 농수산물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생활 자급률은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소득은 지난 94년 도시소득의 99%로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지만 2004년 72%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농가부채는 2004년에 2689만 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자영농가의 43%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한참이나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은 이제 농림부, 해양수산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부처가 농민의 삶의 질 차원의 공동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가의 검역·검사 기관의 통합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는 수입산 납김치 그다음에 발암물질 수산물, 농약 소고기에 이어서 이제는 국내산 송어와 향어, 자라까지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사회 문제는 조금 늦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위생·안전 문제는 시급히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식품 문제는 매우 민감

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식품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正一 議員** 지금 우리나라의 검역·검사 기관이 6개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 기관의 통합 관리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FDA 수준의 검역·검사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기관의 통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반드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분명한 대안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고 또 기준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라카이트 문제 같은 경우도 기관 간에 충분히 사전 정보 교류라든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정부 내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식품 안전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만들려고 식품안전기본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인력이 지금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지금 식품이 들어올 적에 보통 관능검사하고 이화학검사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장비와 인력이 적으니까 이화학검사를 실제로 많이 못하고 일부 시료만 채취해서 하는 수준이고 대개는 그냥 사람이 하는 관능검사로 통과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일손은 적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세우면서 획기적으로 이번에는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인원을 꽤 많이 보충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검역체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正一 議員** 과거 10년 것과 비교해 보면 10년 전에는 1인당 건수가 한 80여 건 되던 것이 지금은 800여 건으로 늘어났는데 인원은 그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검사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인원 한 500여 명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항구도 많아졌고, 우

선 물량 자체가 대폭 늘고 있고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조직 체계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아주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장비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수준을 대폭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正一 議員** 제가 질문드리는데 이것은 정치 문제나 이런 것하고는 달리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때 대선공약에 농림예산 10%를 주장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국가예산 중에 우리 농림부 예산이 몇 %나 되고 얼마나 되는가요?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6%가 조금 못 될 겁니다.

○**李正一 議員** 숫자상으로는 그게 8.9%로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8.9%요?

○**李正一 議員** 8.9%,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8.9% 내에 우리가 부채상환 자금에서 작년에는 한 3조 2000억 썼고 금년에 보니까 한 2조 7000억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 버리면 농림부 예산이 5조 몇 천억이기 때문에 그게 6% 미만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농어민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인데 총리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우리가 농업 분야는 어차피 예산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로 향후의 농촌·농업 분야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쌀 개방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119조를 가지고 세우도록 지난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농촌을 그동안에는 농업이라는 문제로만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농촌의 농업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복지 문제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접근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대략 119조를 가지고 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李正一 議員** 대선 공약에서 농림예산 10%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농업 희생 의지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대통령 후보께서도 농어민에 대한 약속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이행 사항을 총리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것은 이따가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정부는 쌀 협상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올해 안에 비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화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쌀 협상 비준을 하지 않으면 자동 관세화가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UR 협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94년도 UR 협정 당시에 협정이, 예외 없는 관세화가 UR 협정의 기본입니다. 거기에 농업협정 부속서가 5항이, A B C D 쪽 내려가 있습니다. 마는 일본은 A항이고 한국은 5항 B에 속해 있습니다. 그 속에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내에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을 마무리해야만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 한 해에 정부는 쌀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UR 협정의 기본 정신인 예외 없는 관세화로밖에 갈 수 없다는 이론적 근거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李正一 議員** 지난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공청회에서 송기호 농업 전문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TO 협상상의 룰은 각 나라가 협의를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을 거부하면 협상은 무효이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WTO 협정과도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두 가지 사항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WTO 협상상의 룰은 각 나라가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을 거부하면 쌀 협상 결과는 무효이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이미 밝혀졌고, 많은 법률 전문가나 대학 교수들도 송 변호사의 주장은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WTO 협정상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

항을 가지고 송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正一 議員** 찬반에 대한 이 판단을 권위 있게 해석할 만한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WTO 일반 이사회가 최종 기관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李正一 議員**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의뢰를 국가 단위로 해 보지를 않습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무엇을 말씀입니까?

○**李正一 議員** 지금 송기호 변호사가 주장하는 그런……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농림부장관 박홍수** WTO 규정에 가장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WTO 일반 이사회와 각료회의이지 않습니까?

○**李正一 議員**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은데 우선 국회에서부터, 국민부터, 정부부터 찬반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못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오늘도 12일째 바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 이해를 못 합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두 가지를 혼돈해서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WTO 협정은 국외적인 사항이고, 그 협정 결과가 국내에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헌법 60조1항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나라 헌법 60조1항에 국내의 국회 동의 절차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라면 국제 협정 맺은 그 자체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 절차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절차와 국제적인 쌀 협상과의 관계는 바로 직결시킬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협상은 협상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기 위해서 국내적 절차가 60조1항에 있으니까…… 즉 그런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正一 議員** 지금 농민단체들은 실질적인 농업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에서는 농민단체 요구 내용을 얼마나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미해결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그렇지 않아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 하고 있는

상호금융 자금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상환 돼야 되는 금액이 5조 9000억 정도 됩니다. 조수입 전체가 22조 3000억밖에 되지 않는 농업 부문에서 5조 9000억 규모를 일시에 상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최종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5년 동안 연기시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자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금리도 1.5%까지 내려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농지구입자금 마찬가지로 쌀 전업농이 쓰고 있는 농지구입자금의 금리도 3%에서 2%로 하락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이외에 현재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예산당초 100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대폭 수용해서 322억을 추가해서 총 422억의 규모로서 농지은행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쌀 시장의 가격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WTO 규정의 명백한 위반사항입니다. 또한 우리의 쌀 산업을 위해서도 정부가 여태껏 과거 10년 동안 직접 시장에서 쌀 가격을 헐렁했기 때문에 쌀 산업이 갖는 경쟁력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체 시장가격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오늘 오후 3시에 같이 발표합니다.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새로운 자금 5000억을 투입시켜서 농협 RPC가 그 자금으로 현장에 있는 쌀을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침에 합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협이 이미 50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000억을 더 보태서 1조 원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쌀을 사기로 그렇게 결정을 아침에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李正一 議員** 결정을 누구하고 봤다는 얘기에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농협중앙회장과 아침에 합의를 했습니다.

○**李正一 議員** 우리가 과거에 농정 정책을 보면 UR이 시작돼 가지고 농어촌구조자금 42조, 농특세 15조 전체 백몇조를 썼는데도 그때는 우리 농가부채가 470만 원이었거든요. 백몇조를 쓰고 지



금 계산해 보면 농업 부채가 약 2700만 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토털로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 말씀하셨듯이 5000억을 해서 뭘 하고 1조를 해서 뭘 하고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문제는 전반적인 중앙부처 전체의 문제이지 농림부, 해수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WTO 각료이사회에서는 어떠한 안에 대한 결정이나 제시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홍콩 각료회의 끝난 다음에 보고 해도 안 늦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저는 지난번 국정조사 시나 상임위에서나 많은 부분에서 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고 또한 합리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正一 議員**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농민들의 한탄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쌀값이 얼마나 하락이 됐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지난 10월 20일 조사하고 지금 8일 만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을 장관이……

**○농림부장관 박홍수** 어제 오후까지 전국 평균 13.4% 정도가 하락돼 있다고 오늘 아침 집계되고 있습니다.

**○李正一 議員** 지난번 10월 20일 할 때 예를 들어서 경기지구는 쌀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하락폭이 있어도 %로 따지면 한 9%,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주곡단지인데도 그런 데는 한 20%씩 차이 나기 때문에 불공평한 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관이 한번 소신 있게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지역적으로 쌀값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경기도의 평균가격은 21만 원 꼴 되었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은 약 15만 원선이 평균 시세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 간에 차이 나는 것은 현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평균

적으로 하기는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正一 議員** 쌀 가격을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입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예, 그렇습니다.

**○李正一 議員** 그러면 장관께서는 그 쌀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농가소득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지, 또 적정한 쌀 가격의 변동폭은 몇 %인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년도 쌀값 하락폭을 기본적으로 5% 정도가 하락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했고 그에 맞추어서 농가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예산도 8600억 정도 세웠습니다. 현실은 그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새로운 양곡제도가 50년 만에 도입되기 때문에 그 제도에 적응하는 것이 현재는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까지 재고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고 물량에 수확기까지 겹쳐서 그러한 현상이 또 생긴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하루 빨리 시장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正一 議員** 제가 장관께 부탁드립니다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쌀소득직불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별 손해가 없다고 그러지만 85%는 보상을 하지만 15% 자연감소분은 농민이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이 쌀값 하락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농민에게 개방해 주고 그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정책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다른 부분이 많아서 농림 부분은 이것으로 하고 이 안에 몇 가지 서면질문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예, 알겠습니다.

**○李正一 議員** 해양수산부장관, 지난 10월 18일 감사원은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부산항과 광양항의 소모적 경쟁으로 항만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항만정책인 투포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확

인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옛날에 부산시장 대행 시절에 부산항 우선개발을 주장했고 지난 1월 취임 후의 기자간담회, 9월 5일 기자간담회, 또 9월 14일 싱가포르 선사대회 간담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항 우선개발 지지 발언을 해 왔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투포트 시스템과 원포트 시스템 중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제가 과거 부산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일국의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어떤 특정 지역의 편에 서는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의 물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 하는 데 가장 중점적인 방향을 두고 이 항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투포트 시스템의 문제는 이미 우리 국가가 85년도부터 부산항과 함께 광양항을 우리나라 대표 허브항만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고 이미 광양항은 12선석이 가동 중에 있고 7선석이 공사 중에 있는 정도로, 거의 지금 현재 북항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큰 항만으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투포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투포트 정책은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李正一 議員**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말이지요, 2004년 부산항은 시설 가동률이 158%이고 광양은 34%, 부산항 물동량은 116% 광양은 36%, 항만 건설 공정률은 부산항은 26% 광양은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양과 비교대상인 항만이 개발이 완료돼 포화상태인 부산항입니까, 아니면 건설이 진행 중인 부산신항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부산항 전체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라는 여기 시설 가동률이나 물동량이나 공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가동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완공되어 있는 시설을 얼마나 가동시키느냐의 비율이고 그 다음에 공정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건설 중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의 공정이 어느 정도냐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대상 자체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正一 議員** 제가 감사원 감사 지적하는 것은

물동량 기준은 부산항을 비교하고 있고 공정률 기준은 부산신항을 비교하고 있고 시설 가동률은 또 부산항을 광양항과 비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나는 감사원 결과가 잘못 비교되고 잘못 분석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광양항은 지금 건설 중인 항이고 부산항은 물동량이 포화상태인 항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항을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 조사치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2004년도 KMI에서 발표한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을 보면 2011년 컨테이너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물품 품목에 대한 물동량 기준으로 할 때 광양항이 2억 9100만t, 부산항은 2억 7500만t으로 광양항이 국내 최대 항만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예,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컨테이너 물동량에만 치중을 해서는 안 된다, 컨테이너 물동량과……

**○李正一 議員** 그래서 그 잘못된 비교 대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비컨 물동량을 통합한 총 물동량 기준으로 볼 때는 앞으로 광양항이 2011년도가 아니라 이미 그 앞에 국내 최대의 항만으로 위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李正一 議員** 토털 물량으로 항만 관리하는 것이지 컨테이너 하나만 떼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그렇습니다.

**○李正一 議員** 그런데 왜 장관은 어디 가기만 하면 부산항하고, 광양항은 보조항으로 발언을 하시냐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가 너무 컨테이너 물동량에만 치중하지 말고 총 물동량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 항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논리를 만들자 해서 지금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正一 議員** 요즘 해수부 일각에서는 One Port Two Terminal 또는 Two Port One System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One Port Two Terminal 또는 Two Port One System은 결국 항만정책의 기본 틀인 Two Port

System을 포기하려는 의미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산항과 광양항이 서로 무한정의 경쟁을 해서 일정한 물동량을 서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 안 되겠다 하는 발상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연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正一 議員** 장관께서 부산하고 광양하고의 부대시설을 조사 분석해서 가지고 대비를 해서 양항 정책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광양하고 부산은, 그런 수치로 대비하면 광양항은 애초 개발을 안 했어야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그렇습니다.

○**李正一 議員** 그렇다니요?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현재 부산항은 다른 국제적인 항만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항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산항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울러 광양항의 경우에도 신설 항만이기 때문에 물동량을 빨리 창출할 수 있는 항만으로, 자생력 있는 항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또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李正一 議員** KMI의 수치, 광양이 2억 9000만 t 부산이 2억 7000만 t 이 수치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 두고 물어보니까, 광양항은 없애도 관계 없겠네요?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광양항을 없앤다는 말씀이 왜 갑자기 나오셨지요? 제가 잘……

○**李正一 議員** 광양항이 최대 항으로 부상을 안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수치 비교를 해 가지고 광양항은 개발이 더더도 괜찮다는 견해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광양항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또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해서 광양항에도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李正一 議員** 최대 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SOC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야 배가 들어오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예.

○**李正一 議員** 그런 정책을 구상해서 광양항의 발전 계획을 세워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예.

○**李正一 議員** 제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비교대상이 다른 감사원 감사 자료를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해양·물류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특정 항만만 옹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동북아 물류 중심 정책에 반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하여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광양항이 조금 더 많은 물동량을 갖도록 하려면 우선 항만 배후부지에 마린센터라든지 종합물류센터, 배후수송도로 등과 같은 간접 시설들이 빨리 확충되어야 됩니다.

또한 제가 저번에 유럽에 나가서 광양항에 중점적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고 왔는데,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의 STC-R의 분교를 광양항에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또 LME의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으로서 광양항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자라든지 하는 것을 성취시킨 것도 바로 이런 취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광양항은 역대 어느 항만도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륨인센티브제를 비롯하여 많은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당분간 물동량이 일정한 수준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광양항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正一 議員** 아무튼 양항, Two Port System 정책을 유지하셔서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0초밖에 남지 않아서,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J프로젝트에 관한 것을 총리께서 직접 도와주셔서 우리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질문으로 돌리겠습니다.

최근에 한중검역고위층협의체 구성이라는 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농업·식품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보면 공산품 안전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2001년에 우리가 당했던 마늘 파동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안 들어가 있고 일반 행정가들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농수산물 이쪽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총리께서 다시 한번 잘 짚으셔서 가지고 다시는 지난 2001년 마늘파동 같은 농업과 수산업이 희생되는 정책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지금 식품 문제 때문에 한중 간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통상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부에서 그리고 해수부에서 또 농림부에서 중국과의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감안해서 한중 간 교역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식품이 교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正一 議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이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핵심적인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지켜보시는 사랑스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과학기술인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홍창선 의원입니다.

질문 시간이 15분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짚지 못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최빈국에서 이제 경제 11위 국가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산업현장에 계시는 여러 역군들,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노고를 이 기회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이 미래로 가는 열쇠다, 이

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이라니까 우선 경제 몇 가지 한 수 배우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관련 들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경제지표에 대해서 질문 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2000년 5118억 불에서 작년에 6800억 달러로 되었다는데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홍창선 의원 금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금년에는 실질성장률이 3.8% 정도 성장하고 물가가 한 3% 정도 성장할 것 같고 환율 절상이 한 10% 정도 할 것이기 때문에 1인당 GDP로 보면 1만 6000불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그렇군요.

어제도 그리고 최근에 경제 하시는 분들이 성장률을 가지고 높다 낮다, 옥신각신들 하던데…… 그저 궁금해서요.

작년에 4.6%였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그렇습니다.

○홍창선 의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측이 가능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한국은행 같은 데에서 약 3.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모든 당의 후보들이 다 비슷하게 했는데 공약 때 7% 성장률,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인플레이를 일으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잠재성장률을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해의 성장 자체를 5%보다 더 하고 덜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면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5% 정도가 적절한 성장이라고 보겠습니다.

○홍창선 의원 전에 소득이 적을 때는 10%대 성장도 한 적이 많이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전체 성장률, 지난 한 40년 동안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성장률은 약 7~8%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제가 보니까 10% 넘었던 해도 몇 해 있더라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넘었던 해도 많습니다.

○**홍창선 의원** 그런데 그때는 경제 규모가 작을 때이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그렇습니다.

○**홍창선 의원** 그러면 국민소득이 1만 5000달러 이상 되는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이 대충 얼마나 돼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성숙된 경제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대개 2~3%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1인당 GDP가 3만 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홍창선 의원** 인구가 한 2000만 이상 되어야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그렇습니다.

대개 2~3% 정도 성장합니다.

○**홍창선 의원** 제가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국민소득 1만 3000달러 이상 되고 인구가 이렇게 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그렇습니다.

○**홍창선 의원**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 경제 규모에서 이렇게 성장률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은 아마 좀더 잘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들 하시는 것이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잠재성장률로 보면 4~5% 정도 성장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3/4분기부터 잠재성장률에 가깝게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전체로 보면 상반기가 거기에 못 미쳤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장에 대한 인식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홍창선 의원** 그렇군요, 국민들은 ‘경제’ 하면 세금에 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조세정책, 즉 조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흔히 봉급생활자들을 유리자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역시 근로자들은 원천징수를 통해서 사용자가 매달 월급을 줄 때 소득세 징수를 이미 상당 부분하고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떼기 쉽다 이것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홍창선 의원**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봉급생활자가 전문적인 개인사업자보다 평균 4배나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15개 전문직종 개인사업자 중 17%가 월 평균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들었습니다.

○**홍창선 의원** 또 작년에 회수되지 않은 조세채권만 해도 한 4조 2000억에 달한다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들었습니다.

○**홍창선 의원** 그러면 이렇게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불평등하게 세금이 매겨진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물론입니다.

○**홍창선 의원** 어떻게 제대로 파악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있다고 하는데 명단 같은 것도 좀 발표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정부로서도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세정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신용카드를 통해서 투명하게 밝혀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2003년 8월에 세원 투명성 제고 전략을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부담과 과세 인원이 근로자보다도 증가 속도 면에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자영업자의 경우에 98년부터 2003년까지 약 72%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소득 파악 수준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그것 제대로 못 걸으면 세무서 봉급을 깎으면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그러니까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우선 파악을 하고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요즘 병원 같은 데에서 쌍꺼풀 수술 같은 것을 하면 신용카드로 결제가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신용카드를 받도록 강력하게 국세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세금 제대로 내면 바보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선 의원** 그다음에 하나는 복지정책,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분들이 한 8만여 명 되고 가족 중 5000만 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가 1000여 명 이런 식으로 지원 대상 관리가 좀 엉터리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그것은 정부에서 매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조사와 확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오늘 신문에도 ‘지자체 부과금 내는 사람이 바보’ 이라고서 경제신문에 났어요. 이 행강제금 체납률 서울 60% 부산 80%, 지방에서 이것 부과만 하고 걷어 봐야 중앙에서 가져가니까 성의를 안 내고 걷지 않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세금 관련해서 봉급생활자만 미리 뚝 떼어 가고 이렇게 내야 할 사람은 안 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홍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감사합니다.

○**홍창선 의원** 다음은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대도 못하시고……

IMD가 최근에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작년 35위에서 29위로 여섯 계단 상승했다, 많이 보도도 되고 아시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알고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총리께서는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IMD 보고서를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상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만도 중요하지만 우리하고 유사한 인구규모나 우리하고 앞으로 경쟁을 해야 될 나라들,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하고 비교분석도 상세히 해서 각 부처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만……

○**홍창선 의원** 상승의 큰 원동력이 뭐냐 이것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큰 원동력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이 비교적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술경쟁력은 2위 수준으로 나와 있고 과학기술력도 15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27위 수준에 비하면 두 영역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와 있고 IT 인프라 쪽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으로 나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홍창선 의원**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전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것을 총리께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네이처나 사이언스, 셀 이런 세계적인 저널에 거의 매달 게재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많이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홍창선 의원**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는데 전에 BK사업이라든가 이렇게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하니까 성과가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홍창선 의원** 그래서 앞으로 R&D 예산이 많이 늘어서 GDP 대비 한…… 지금 0.7%를 넘었습니다. 상당히 늘었습니다마는 다른 선진국들이 1만 불에서 2만 불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GDP

대비 한 몇 % 정도 R&D에 투자했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나라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선진국들이 대개 한 1% 정도 투자를 하지요.

○**홍창선 의원** 1%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는 살림에 최근에 아주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해답은 R&D 과학기술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정치 분야보다 과학기술에 더 신경 쓰시면 훨씬 더 국가 미래가 밝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이 된 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작년에 현정 사상 정기국회를 개최하는 날 법안을 통과시켜서 1년 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 성과라고 할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오명**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가 출범해서 꼭 1년이 됐습니다. 다른 답변 말씀에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부총리 체제를 만들어 주실 때 여야 없이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원회를 거치면서 또 작년 정기국회 개최날 바로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홍창선 의원** 그런데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대개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요.

지금 연구원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오명** 연구원들이 원하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홍창선 의원** 큰 것이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오명**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미 세밀하게 분석을 했고 하나하나 정리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외관적으로 보게 되면 조직을 통폐합을 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이 우선 눈에는 잘 띄입니다. 제가 지금 택한 것은 외과적인 수술이나 변화보다는 보약을 먹여 가면서 천천히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받아 가면서 발전시키는 그런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제가 현장에서 듣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여럿 중 하나가 IMF 이후에 정년이 61세로 줄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랬는데 그분들 희망이야 이게 좀 과거로 돌아갔으면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오명** 정년을 늘리는 것이 모든 연구원들의 희망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년을 늘리게 되면 물론 추가적인 재원 부담도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젊은 연구원을 채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또 전반적으로 연구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수한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퇴직 과학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퇴직한 과학자들이 그동안 경험을 살려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고급인력을 채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분야가 맞는 데 매치시켜 가지고 가서 기술고문처럼 일을 하면 중소기업도 좋고 본인들도 고령화사회에 가까운 지식을 썩히지 않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제도적으로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오명**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27일에 개최됐던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이공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중의 한 파트가 퇴직 연구원들을 후학을 양성하고 기술정보를 분석하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선 의원**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은 보통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이공계 기피현상 이런 것이 결국 학부모들이 그렇게 보고…… 어제든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이 무슨 설문한 것에 보면 학생은 이공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결국 처우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오명**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는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골프채널을 보다가 위성미 선수가 프로로 전향하면서 1000만 불을 받는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탤런트가 CF를 찍는데 10억을 받았다, 또 어느 스포츠 스타가 나왔을 때 몇 억대 연봉을 계약했다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스타급 과학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다른 분야 못지않은 파격적인 예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잘하는 사람은 좀, 과학기술은 국제경쟁을 하는 국제선수거든요. 확실하게 처우가 돼야지 현재 상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잘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미래 성장동력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핵심 인재가 바로 미래 성장동력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오명** 그렇습니다.

**○홍창선 의원** 바둑 5급짜리 5명이 머리 맞대고 궁리를 해 봐야 초단 1명을 못 당합니다. 그래서 기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장 평균 연봉이 1억 남짓 하더군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오명** 그렇습니다.

**○홍창선 의원** 1억도 안 되거나…… 제가 부총리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총리께서도 계시고 기획예산처장관님, 관계 재정부총리가 계신데 정부 산하기관이 지금 83개 기관인데 기관장 등 평균 연봉을 보니까 재정부 산하기관은 평균 2억 7000만 원이 넘고 건교부 산하는 1억 4000만 원이 넘고 참……

한번 뒤에 그림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에 있는 파란 게, 제일 난쟁이 같은 게 CDMA·TDX 개발한 전자통신연구원 원장·기관장 그다음에 연구소 대표인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왼쪽 빨간 것은 산업은행, 공적자금 잔뜩 들어간 금융기관들……

지금 저 그림이 정상입니까? 저렇게 하고 계속 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오명**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을 거치면서 1, 2등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와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근본적으로 잘못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의 경우에도 그 안에서 가장 명예로운 분들이 연구기관의 원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황우석 교수를 칭찬을 하면서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중간에 제목을 보게 되면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 글 하나 가지고 우수한, 뛰어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기술계로 들어올 만한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연구소 원장들에 대한 보수는 지금의 2배 정도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지금 R&D 예산을 국민의 정부, 2000년에 4조대에서 내년에는 9조 가까이 갑절로 올리는데 왜 이렇게 사기 떨어지게 처우가, 저는 돈을 잘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처장관도 계신데 엄격히 평가를 해서,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 미래 성장동력 되는 것 아닙니다. 100억쯤 떼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각 기관장한테 주고 잘 하는 사람 몇 명한테는 2~3억씩 나눠줘 보라고 자신 있으면…… 그러면 아마 눈동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오명** 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지난달에 전국의 연구소 소장들 모인 자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선언을 했습니다.

**○홍창선 의원** 그러면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오명** 내후년까지는 분명히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홍창선 의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아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조그만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면 되는데



어떤 것은 여러 부처가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통신회사가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에서도 또 받고 뭐 이런 내용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통신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양쪽 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홍창선 의원**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협의 없이, 정통부의 행정지도를 받고 죽 영업을 하다가 몇 년 후에 공정위에서 1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았다 이거지요?

총리께서 통신업계 CEO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위원회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이라든가 가령 불공정 행위에 관한 것을 관리하는 곳이고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 자체에 대해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데 두 기관이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의 규제·감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창선 의원** 이게 큰일입니다.

같은 정부인데 한쪽 부서에서는 당신 좌측통행 하라고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너 왜 이리 다녀 그러고 얻어맞으면 큰 문제 아닙니까?

두 부처가 조율을 해서 혼선이 없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거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지나간 일이지는 합니지만 기본적으로 한 정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부처의 기준이 전혀 다르면 안 되지만, 그러나 공정거래법도 지켜야 되고 하는 것 또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비단 이 통신사업 분야만 아니라 다른 어느 사업 분야라도 공정거래법은 지켜야 됩니다.

○**홍창선 의원** 물론이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통·방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정해서 우리 산업경쟁력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홍창선 의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

다.

과학기술이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과학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과학기술의 장래에 관한 미래에 관한 홍창선 의원의 질문,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상기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10·26 재선거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아주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봤는데 선거는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그렇다면 지난 재선거 이틀간의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보면, 국정에는 실정도 없고 정체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줄곧 하셨는데, 이 대통령의 말씀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선거 결과하고 여기서 국무 위원들이 답변드리는 정책 사안의 내용하고는 그렇게 직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徐相箕 議員**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더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대구 도심 미군기지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아울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동북아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앞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정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해외 주둔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의 이전에 합의했고,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개정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20여 개의 미군기지가 이전되거나 반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구광역시 도심에만 대규모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도 아직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대구 도심의 미군기지들도 이제 외곽으로 옮겨야 합니다.

총리에게 대구 도심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과 도시발전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입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만 제외한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개발이라는 점에서 타 도시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미 간에 오랫동안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 작전 환경상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미군은

평택하고 군산·대구 이렇게 우리나라의 세 군데 지역을 허브로 해서 재배치하기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대구를 뺀 것이 아니고, 미군학교의 협의 과정에서 미군이 그렇게 세 군데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요청하고 우리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대구하고 군산은 존속을 하고, 평택은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중심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대구 중심부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요, 최고의 변화가로부터 불과 2km도 채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까운 줄은 모르고 계셨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구 시내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徐相箕 議員** 30만 평이라는 아주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5년 전에 38만 명을 넘었던 주민 수가 이제는 18만 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대도시 중에 이런 현상이 있는 도시를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국무총리 이해찬**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자꾸 늘면 아무래도 초기에 들어갈 적에는 변두리에 위치했는데 나중에는 주거지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에도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지요.

그래서 이전하는데, 이전 대안을 찾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평택도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농촌 농지를 사서 매입하는 데도 그렇게 힘든데 이전 대체부지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옮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徐相箕 議員** 또 한 가지 문제는 시기 문제입니다.

사실상 첫 번째 결정 과정에서 빠진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늦어지면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상 이 미군기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대구는 주로 비행장 쪽에 땅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주로 비행기지로 많이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캠프로서 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비행장은 아닙니다. 비행장까지 포함시키면 대단한 규모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급기지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캠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그런데 보급기지가 도시 중심부에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미군기지를 이전해야 될 중요한 당위성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도심에 있는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인근에 대체부지를 구할 수가 있어야 옮겨질 수가 있는데, 지금 세 군데에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대구 도심은 아니더라도 인근에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부지를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徐相箕 議員 그러면 만약에 대체부지만 구할 수 있다면 옮기는 데는 총리께서도 찬성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다시 또 미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그러나 총리께서는 협의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것은 국방부로 하여금 대구시하고 미군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국방부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총리께서도 국방부의 의견하고 같으시다고 믿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徐相箕 議員 255만 대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미군기지의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구의 부채규모가 2조 8000억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전 비용을 빼고도 수조 원에 달

하는 여유 재원이 있고,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꼭 염두에 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국방부로 하여금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동남권 허브공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건교부장관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사실 동남권 1300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면 그래도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부분이 255만 대구 시민이고 또 가장 환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결정이 됐는데 차제에 동남권 허브공항 추진기획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서 1300만 동남권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의원님 질문서를 제가 잘 읽어 봤는데 실제로 김포에 있던 국제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겨 가는 바람에 영남 쪽에 계신 분들 또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이 김포까지 와서, 바로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에 와서 다시 또 인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중, 두 번을 환승해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제가 지방에 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동남권 혹은 호남권에 국제선을 연결시켜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런 요구가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륙에다 공항을 만드는 것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영종도공항 만들 적에도 섬에다 만드는데도 그렇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제고하는 것하고 건설하는 문제하고를 같이 포함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정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남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여행을 하고 하는 데 가장 적합하겠는가를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검토하고 계시는 것하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를 정부에서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하고는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 기획단을……

○국무총리 이해찬 아니, 해당부서…… 이것은

건교부 업무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검토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어떻게든지 1300만 동남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산업의 27% 이상이 그 지역에 집결돼 있고 또 앞으로는 경박, 조그마한 제품들의 수출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물류의 기능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항공 물류의 비중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필요성은 정부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다 하는 것이 적지 않고, 적지일지라도 그 사업이 과연 수행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徐相箕 議員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통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요즘 서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시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살 비율이 12%나 증가해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가구당 부채만도 3000만 원 이상이고, 최근에 개인 파산이 20배 급증하는 등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경제를 경제를 살려서 풀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우선 급한 대로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공공요금을 감면한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좀 덜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감세에 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그러면 정통부장관과 관련되는 가계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대강 한 13만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그런데 이 13만 원이라는 금액이

서민들 가구의 식비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것은 집마다 다르겠지만 하여간 소비 전체에 비해서 부담이 크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를 못 내서 2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그것도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래서 일부 경감을 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경감시키는 방법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난 국감 때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기본요금에 산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침으로 정했었습니다.

○徐相箕 議員 했었는데, 바로 최근에 기업에서 먼저 발신자 표시 요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선언했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간에 CID 요금을 무료로 또는 인하하자는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사실상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인가 대상 요금으로 넣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고 그간에 또 많은 대화가 있었고, 그 결과로 CID 요금을 지배적 사업자가 무료화를 내년부터 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徐相箕 議員 그렇다면 정부 정책이 빗나간 것 아닙니까? 원래는 기본요금에 산입하자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는데, 지금 무료화를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닭 쫓던 뉘치럼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정책의 목표는 역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CID 요금의 경우에는 무료 또는 인하를 하자는 게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 내로 결국 인가 범위 내로 넣자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목표로 했던 무료화가 실현이 됐습니다.

○徐相箕 議員 그러면 지금 어떡하실 겁니까? 원래 정부 정책대로 기본요금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그냥 무료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황이 끝난 겁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지금 입장으로는 그것을 기본요금에 넣든가 안 넣든가 간에 무료화가 됐기 때문에……

○**徐相箕 議員**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기본요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무료화했다는 것은 언젠가 또 기업체 마음대로 유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다시 그야말로 저희들이 인가할 수 있는 대상 요금으로 넣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그래서 바로 그런 자세가 서민들을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아예 원래 정부 정책대로 기본요금에 산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한때 논란이 되었던 SMS, 즉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것은 물론 액수도 크고 단순히 쉽게 기본요금에 산입해서 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지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SMS 요금도 마찬가지로 부가서비스 형태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신고하는 요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금에 너무 심하게 정부가 개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역시 대외 신인도나 이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SMS 요금은 이미 문자 무제한 서비스라든가 그런 다양한 선택 요금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 경쟁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 부담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SMS는 또 사용량에 따라서 실제 비용이 증가하고,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본 서비스화하거나 무료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徐相箕 議員** 무료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담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서민들의 형편을 생각하신다는 말씀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가계에 대한 통신비용의 부담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통신비용을 나눠서 보면, 통신요금이 비싸서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둘째로는 통신량이

과다하지 않느냐도 봐야 할 것이고요, 또는 통신비에 다른 것들이 전이되어서 오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봐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徐相箕 議員**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돈이 아까워서 하루에 전화 걸고 싶은 것을 참고 참고 해서 한 두 번 밖에 못 거는 서민들한테도 기본요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통신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관이나 저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서민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계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기본요금을…… 지금 기본요금이 하한제로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기본요금은 인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되어 있는 하한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렇지 않습니다. 요금을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 왔을 때 지배적 사업자가 통신 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약탈적 요금을 설정하지 않는 한에는 저희들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한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徐相箕 議員**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탈적 요금 제도를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기본요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것은 여러 가지 각종의 서비스가 계속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는데, 모든 것을 기본서비스에 넣어 둘 수는 없습니다.

○**徐相箕 議員** 지난번에 문자서비스를 기본요금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R&D나 신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R&D나 신규사업에 투자된 것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물론 R&D 비용을 너무 적게 쓴다든가 광고비 비중이 너무 과다하게 크다든가 그러면 좀 걱정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결국 기업활동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통신사업자는 무슨 통

신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불특정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광고비 같은 것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검토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지금 정통부의 정책하고 관련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시장경제 원칙을 따를 것이냐 또 유효 경쟁 체제를 지속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 정부면 정부답게 확실한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 기업의 손익계산서라든지 또 시민단체나 야당의 주장, 목소리 크기하고 이것을 잘 판단해서 아주 편리하게 정하시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제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정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통신 정책은 지금까지 잘 해 왔다는 평가를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서비스의 질도 세계적으로 좋고 보급률도 높고요, 그러면서도 요금은 OECD의 76% 밖에 안 되고, 이런 인가 요금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간에 요금도 36% 실질적인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徐相箕 議員 IT산업을 발전시킨 공로는 인정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통신요금 정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담도에 615억을 투자하셨다가 곧바로 문제가 되니까 바로 회수하셨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그랬습니다.

○徐相箕 議員 만기가 언제입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2009년 5월 4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徐相箕 議員 2009년이 만기인 615억짜리 투자를 문제가 되니까 1년도 안 되어서 회수한다는 그런 예는 본 의원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지금 잘못된 투자를 했고, 잘못 회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원리금 회수에 관련되어서 여러 법무법인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워낙에 문제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이

상당히 많이 남은 채권을 조기에 회수했는데 그것은 존경하는 서 의원님께서도 항상 우려를 해주시고 또 언론 등에서도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 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구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만기 시에도 도로공사에서 주식 매수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원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취한 조치입니다.

약정 이율에 따라서 그동안의 경과 이자를 회수한 것은 채권의 원래 구조상 6개월마다 이자를 수령하게 되어 있어 채권환매 시점에서 이를 정산해서 받아 왔습니다.

○徐相箕 議員 우정사업본부의 돈은 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徐相箕 議員 앞으로는 투자를 하시든 회수를 하시든 항상 신중하고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세스도 바꾸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기부총리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홍창선 의원께서도 이공계 사기 진작에 관련되는 질문을 하셨고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계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인재가 많이 몰리는 의약 분야에 아주 큰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서 가지고 인재와 산업과 좀 매칭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오명 예, 최근 들어서 과학기술계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정립이 됐고 또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과학기술채권까지 발행을 해서 R&D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하고 수출화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는 지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내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경영을 가장 잘 한다고 하는 핀란드에서도 특별보고서를 내고 벤치마킹을 하러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같이 협력을 제의해 오고 있을 정도로 세계 각국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R&D 예산도 다른 분야하고 달리 이미 15%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의 처우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홍창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계에도 스타 과학자들을 많이 육성하고 파격적인 예우를 해서 젊은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더 많은 동경을 갖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지난 8월에 구성을 했고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R&D 등 의약산업 선진화의 기본 방향 및 장단기 정책 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금년 말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07년 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학기술부에서는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이 의약산업의 실용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약 개발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한 연구의 효율화를 위해서 신약 개발 R&D 국가 전략을 수립 중에 있고 줄기세포 연구 등 비교적 우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 및 정부의 위험 부담을 통한 민간 부문의 참여와 역량도 강화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부총리께 거는 과학기술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오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경부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총리께서도 과학기술 발전 또 과학기술

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책과 관련지어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개선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많은 부분이 재정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소득법인세 5% 내에서 기업이 연구개발 인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용을 전액 세액공제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여기에 관련해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학기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나 인센티브를 보면 상당히 유행을 많이 따릅니다. IT라든지 BT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 조선, 자동차가 버팀목이 되고 있고 또 손톱깎이로 세계를 석권하고 모자르며 세계를 석권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익을 남겼으면 자기 회사에 가장 도움되는 연구자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이 법안을 제안했는데, 과기부총리께서는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재경부총리께서도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우선 현행 인센티브에 대한 조세 차원에서 주고 있는 그러한 제도와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이 지금 연구개발 인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용은 전액 기업의 비용으로 지금 인정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특히 연구개발 인력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인센티브는 R&D 개발을 위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년 평균을 초과하는 R&D 비용의 50% 또는 당해 연도 R&D 비용의 15% 중에 큰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세액공제에서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을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법안을 제출하신 것과 기존 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채수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찬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입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내년은 소비와 투자가 경제 회복을 주도하리라는 것이 대다수 연구기관들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가계 부채가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소비 증가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비 회복을 위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총장관 한덕수 예, 우리가 경제 개발을 시작한 40년 동안에 2년 연이어서 소비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작년과 재작년이 처음입니다. 그것은 물론 과거에 카드채를 비롯한 과도한 소비가 그 주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의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올해 몇 차례 걸쳐서 이러한 채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면 한국은행의 예측으로는 이제 이러한 소비자의 구조조정은 거의 끝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훨씬 더 나은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수찬 의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

조정에 더 적극적인 채무 구조조정은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총장관 한덕수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특별 조치로서 하던 것에서 좀 더 정상적인 차원의 제도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워크아웃제도라든지 법원에 의한 파산제도 또 개인회생제도 이러한 상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법원의 이러한 파산제도 활용을 소비자들이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인원도 증원하고 하는 조치들을 지금 올해 하반기 운영계획에 중요한 제도 개혁으로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수찬 의원 투자를 보면 대기업은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설비투자에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상장 기업의 비중을 보면 2000년 55%에서 2001년 64%, 2002년 70%로 올라간 뒤 2003년에는 58%로 꺾였으며 작년에는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척되어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투자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총장관 한덕수 그렇습니다. 상장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려운 그런 와중에서도 플러스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가지는 리스크 때문에 창업투자회사 또 창업투자펀드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보강 또 M&A의 활성화 또 장기간 거액의 신용보증을 받고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에 선셋조항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력을 새로운 중소기업 투자 쪽에 돌리는 그러한 방향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채수찬 의원**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4년간 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프라이머리 CBO의 부실로 정부가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다 보증으로 인한 신보와 기보의 대위변제액은 각각 5조 원, 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보와 기보의 현재와 같은 운영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프라이머리 CBO와 같은 것은 특별히 2000년, 2001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에 대한 하나의 큰 어려움 때문에 기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보증 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적 신용보증을 좀더 효율화하고 튼튼히 하기 위한 제도를 6월 23일 확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분 보증 비율도 인하하고, 또 거액·장기 보증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창업기업과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수찬 의원** 하지만 이런 보증제도가 우량 중소기업을 살리는 측면이 있지만 또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의 퇴출을 저해하는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규모의 보증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서 그 여유를 새로운 창업기업에게 돌리겠다 하는 방침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채수찬 의원**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채수찬 의원** 현재의 회복세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식집약형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선진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지식기반형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금융·관광·의료·교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가는 성장엔진으로 삼

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국제 경쟁력의 약화로 서비스 수지의 만성적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의료·교육 산업의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여 해외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산업 분야에 관하여 부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 금융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갈 길이 멍니다.

정부는 우선 2007년까지 7대 과제 실행을 통해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2012년에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를 완성시킨 뒤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7대 추진과제 중에 한국투자공사 설립 외에는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7대 금융허브 추진 과제는 돌려 말하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 개혁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투신사 구조조정을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서 지금 자산운용업의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증권·선물 거래소를 통합했고, 7월에는 외환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는 계속 축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규제와 감독 시스템에 있어서 제로베이스에서 그러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관의 서비스 기능 강화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충분치는 않지만 우리 금융산업의 개혁을 통해서 동북아에 있어서의 금융허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푸르덴셜이라는 세계의 우수한 금융회사가 자산운용 부분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한국에 두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찬 의원**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우리은행의 매각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매입 주체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우리은행은 현재 우리 금융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행의 민영화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와 또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어떠한 매각 방법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두 가지의 목표를 조화 있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주체에 대한 자격 요건은 금융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감독기관이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찬 의원** 경쟁이 없이는 산업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경쟁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려면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현행 금융 관련 법에 따르면 금융업을 하려면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자격증을 가진 금융 전문가도 일정한 숫자를 넘어야 합니다.

물론 은행처럼 신용창조를 하거나 보험회사처럼 가입자의 권리를 장기간 보장해야 하는 금융회사라면 이런 규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중개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망하더라도 그 책임이 궁극적으로 투자자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에 높은 설립 자본금과 많은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5조(허가요건)을 보면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파생상품·실물자산, 사모펀드 등을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최소자본금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산운용업의 자본금 요건을 10억 수준으로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지금 구체적인 수준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산운용업은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아주 유망한 우리의 금융산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 그리고 전문인력 요건도 충분히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화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수찬 의원** 화폐 발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10만 원권이나 5만 원권의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현재 화폐 이상의 고액권을 발행할 계획은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채수찬 의원** 10만 원권이나 5만 원권의 발행이 곤란하다면 통화 소지자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2만 원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2만 원권이 발행되면 1만 원권의 장수가 일부 감소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화폐의 발행체계가 1·5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단위 체계의 화폐에 그렇게 익숙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현금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신용카드라든지 인터넷뱅킹, 폰뱅킹 같은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의 화폐 단위에서 좀더 고액화하는 부분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수찬 의원** 미국에서도 10불짜리 못지않게 20불짜리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화폐 소지자의 편리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체계라는 것은 고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현재의 화폐 이외의 고액화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수찬 의원** 화폐 단위의 간편화와 원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1000원을 1환으로 부르고, 함께 사용하는 병행 화폐 단위를 도입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화폐 단위는 국가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

러한 화폐 단위가 병행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는 오히려 거래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병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가격표 등을 병행 활용하는 데 따르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유로화 도입과 같이 경과기에 병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화폐 단위를 병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 단위의 병행이 혹시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화폐 단위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수찬 의원 장기적으로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전제하에 과도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현재 정부는 그러한 계획은 일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채수찬 의원 알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외화 획득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파급효과가 큼니다. 2008년에는 세계 총생산의 20%를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2010년에는 동북아를 찾는 관광객수가 약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아의 각 국가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소득이 증대하고 주5일제가 되고 해외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보다는 나가는 양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데 주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내의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약하고 휴양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많이 관광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채수찬 의원 저는 주변의 일본과 중국, 동남아에 비해서 관광인프라와 경쟁력이 부족하고 또 정부의 체계적인 관광산업 육성 전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우리 고유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어 관광자원으로

서 활용 가치가 큼니다. 정부가 이러한 축제를 연결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있었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관광 축제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라든지 부산 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성공적으로 된 것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관광 인프라도 약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를 다녀오는 것에 비해서 국내에서 관광하는 것이 그렇게 싸지 않은 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채수찬 의원 제가 지역 축제를 다녀 보면 동네잔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결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국 중국이나 일본의 관광 명소를 활용하는 역발상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내에 거점 관광 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주변국의 관광 자원과 연결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 및 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런 방향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동북아 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크루즈선을 운행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좀더 발전되면 북쪽에 좋은 관광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일본에서 우리를 거쳐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철도관광도 더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수찬 의원 다음은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제조업보다 4배나 큰 고용 효과를 갖고 있으며 연관 산업의 유발 효과도 매우 큼니다.

지난 10월 5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발족했

습니다. 존경하는 서상기 의원의 질문에 답해서 과기부총리께서 일정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위원회의 현재 비전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지난 10월 5일에 제가 직접 주재를 해서 의료산업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분과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의약품산업발전 쪽이 있고 의료기기산업 쪽이 있고 의료서비스산업 쪽이 있고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하는 것이 있고 의료분야 연구개발 쪽이 있고 제도개선 쪽이 있고 전부 해서 6개 분과로 나누어 가지고 분과별 전문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과별 진행이 끝나면 이것을 다시 종합해서 올해 말쯤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고 전문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수찬 의원**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높은 의료 기술과 의료 인력 등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좋은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 수준이 대체적으로 암 치료라든가 장기 이식술 이런 것은 세계적인 수준하고 큰 차이가 없고 다른 분야도 세계적인 수준보다는 못 하지만 거의 한 80% 정도는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앞으로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 분야는 오히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활용을 해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의료산업선진화위의 기본 방향입니다.

**○채수찬 의원** 국내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문치료 중심의 의료집적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나의 과제로서 의료집적화단지가 거론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러한 것이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의료집적화단지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닌데요.

경제자유구역 의료집적화단지가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와 같은 건강보험 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영리가 허용이 될 수 있는 집적화단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외국 환자들

이 치료를 받으러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이루어진 것은 미국 의사가 미국 환자를 진료한다라든가 일본 의사가 일본 환자를 진료하는 수준까지는 지난번 규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리법인이 개설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경제자유구역에는 지금 외국인이 영리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고 내국인도 일부는 입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줬는데 아직 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제주도 특별자치도에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가 실용화 되는 단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른바 첨단 복합의료단지 이런 것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채수찬 의원** 치료와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 또 특화된 관련 전문 의료기관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장기 치료 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갈수록 요양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저와 치료와 관광이 결합되는 이른바 콤플렉스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의료계의 큰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주도라든가 남해안 일기가 좋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아마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채수찬 의원** 의료 광고의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다시……

**○채수찬 의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의료 광고……

**○국무총리 이해찬** 의료 광고요?

**○채수찬 의원** 예, 규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채수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해서 민간 부문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정부 지원을 집중해서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앞에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에 의료법인, 영리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환자들이 그리 집중적으로 쏠릴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공공의료 체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공공의료 지원 쪽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4조 3000억의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번 정책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부문의 국가의 책임, 공공성과 이른바 규제 개혁을 통해서 영리법인화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로 가고자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채수찬 의원** 민영 보험사에서 이미 암 보험 등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공공 부문 보험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현재 민간 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의 도움을 받아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는데 결국 민간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할 분담을 잘 해서 건강보험이 잘 유지되면서 환자들에게 보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보험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 민간 의료보험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찬 의원** 다음은 교육산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 사회의 도래와 지식산업의 발전, 교육서비스의 자유화는 교육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국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교육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교육

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현주소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해외 지출로 연 국내총생산 3조 6000억 원, 일자리 12만 개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수지 적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잡히는 통계를 보면 작년도가 24억 7000만 달러이고 금년은 3/4분기까지가 25억 5000만 달러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30억 달러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인데 이외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비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것 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추산해 본 바로는 약 50억 달러쯤 될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채수찬 의원** 50억대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습니다.

○**채수찬 의원** 총리께서는 이러한 교육수지 적자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결국은 세계화가 되면서 외국 유학의 필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생기고 있지요. 대학에서는 MBA 코스라든가 국제변호사라든가 이런 요구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초·중등 쪽에서도 영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특히 우리나라가 전문 직업교육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유학 가는 경우가 아주 많고 다양하게 여러 수준에서 막 생기고 있습니다.

흔히 조기유학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고 대학생들의 영어 연수 과정도 지금 대학생 중에 외국에 가서 영어 연수를 안 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교육 수요로, 세계화가 되면서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수찬 의원** 그러니까 국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국내 경쟁력이 강한 분야도 더 강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약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으레 국내 교육이 약하니까 외국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령 지금 우리의 고등교육 중에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내법에 대해서는 강하지요. 그런데 국제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고 있고 MBA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서 일정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MBA를 국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보다 좋은 MBA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4만 불, 5만 불 내는 MBA를 가서 하는 경우도 기업계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수찬 의원** 우리나라 교육산업은 대표적인 고용 저효율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중 공교육비가 6%,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13%를 넘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서로 경쟁하면서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고 대폭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 흔히 그냥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줄 알고 제가 교육부를 가 보니까 교육부의 인력이 450명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의 인력이 450명인데 그중에서 편수하는 사람들 빼고 나니까 그것도 안 되지요. 한 300명밖에 안 되지요. 그 300명이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전혀 아닙니다. 대학이 300개인데 대학에 대한 담당 직원이, 국이 하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과 30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선…… 교육부의 규제가 많아서 무슨 교육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대학 같은 경우는 허가제에서 설립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80년대부터 그랬지요. 기본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대

학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 하고, 기본 교사시설과 교수요원만 확보하고 교육용 재산만 있으면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끔 되는 바람에 대학이 지금 한 300개 가까이 됐죠.

그래 가지고 학생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팔십몇 퍼센트가 넘는 세계 최고의 진학률을 갖는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학사에 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학습목표에 대한 관리도 안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규제가 많다고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분석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금은 서로 학교 줄이느라고 난리입니다. 너무 학생이 줄고 있으니까. 설립신고제로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방만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규제가 많아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선 인식을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보다는 정부가 좀더 엄격하게 대학의 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체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수찬 의원** 저도 대학 강단에 20년간 섰던 사람으로서 피상적으로 제가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정말 피상적인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교육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유치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인가를 받으려면 그런 학교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인가를 안 받는 학원이라도 만들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부는 친절해서 학원까지 다 규제한다고 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 규제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견해를 달리하시는데요.

**○국무총리 이해찬** 보통 교육……

그러니까 영리교육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도 영리를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은 직업교육 기관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좋은 사립대학들도 전부다 학생

들한테서 받는 돈은 학교 예산 중에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오히려 기부를 받아 가지고, 동창회에서 기부를 받거나 다른 기업에서 기부를 받거나 또 아니면 R&D 연구비로 기부를 받거나 해 가지고 대학을 운영해야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배당해 준다는 거……

영리를 한다는 것은 배당하기 위해서 영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학은……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파악해 보니까 미국에 있는 아주 몇 개의 직업전문대학 이런 데는 조그만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대개의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배당하는, 영리를 하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꾸 영리화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주는 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채수찬 의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도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은 비영리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기관도 영리교육기관이라는 말은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거의 없습니다.

**○채수찬 의원**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규제라는 것은 영리기관, 비영리기관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는, 교육의 경쟁력을 막고 있는 너무 친절함이 교육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만 다른 기회에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금융 관광 의료 교육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와 안주가 아니라 경쟁과 혁신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첨단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양대 성장 축으로 삼아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채수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을 출신 정두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 금요일 콘서트 때의 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노무현 정부가 벌이는 시원치 않고 썩썩이는 헤프고 빛은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 마치 신용불량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리님을 모시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10년 가까이 끌어 왔던 기후변화협약은 올해 드디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화면에 곧 그림이 나올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문제는 우리가 책상에서 논란만 벌이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해서 기상 재난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에너지 규제를 통해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국무총리 이해찬** 예,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지금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제1차 의무이행 기간에서는 일단 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작되는 제2차 의무이행 기간에는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현재 교토의정서대로 간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일부 고성장 국가들 내에서 교토의정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논의가 일각에서 또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우리나라가 지금 일산화탄소 배출국 세계 9위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로 2010년

에 가면 영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만큼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토의정서대로 가서 2차 의무기간에 들어가서 대상국이 될 것에 대비하는 노력이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로 미국이라든가 CO<sub>2</sub>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세계 환경질서에 관한 다른 새로운 체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도 저희가 같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차 의무기간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서는 결국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런데 우리가 1, 2차 종합대책 기간이 3년 단위로 끝났습니다. 지금 3차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이 아직 별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얘이지요.

현재 세계 각국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대책들이 교토 메커니즘이라는 세 가지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배출권 거래라든가 공동 실시 또 CDM이라고 청정개발체제, 이런 건데요. 총리께서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권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 거래가격이 2004년 말 현재 1t당 26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7년이 1차 감축 시한인데요, 그때가 되면 점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 곧 돈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권 거래에 대비해서 우리는 주로 사 써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CO<sub>2</sub>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상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산자부장관님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러면 이 뒤 질문은 산자부장관께 드릴까요?

○**국무총리 이해찬** 구체적인 내용은 산자부장관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무대상국은 아니지만 CDM, 청정개발체제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사 써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팔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 팔수가 있는데요. CDM, 청정개발체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CDM과 관련해서 북한에 나무 심기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북한은 산림이 아주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있고요, 이것이 식량난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나무를 계속 심어 주면 북한의 황폐화와 식량난을 막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서 배출권을 얻어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당사국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 제안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조림사업을 해서 CDM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러려면 지금 북한이 교토의정서에는 가입은 해 있는데 아직 국가 승인 기구를 구성해서 유엔에 등록하지는 않은 상태라서 CDM 사업을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림하는 사업이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북한하고 협의가 돼서 남북 간 경제 교류·협력 차원에서 합의가 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두언 의원** 그래서 올해 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하고 환경부가 처음 이 문제를 논



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심기를 한다면 국제적으로도 많이 협조를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총리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다만 북한은 지금 환경 문제나 이런 데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우선은 식량 증산이라든가 생필품 생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국가의 우선순위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 언급은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이라든가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두언 의원 총리께 제가 지난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를 통해서 국토의 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 이전을 비롯해서 혁신도시 건설 또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각종 클러스터, 벨리, 타운, 파크 또 프로젝트 이런 개발이 전 국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국토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타당성은 다 있는지 또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하여간 예산 낭비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다 보면 전 국토가 투기장화되어 가지고 지가가 막 상승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아름다운 국토가, 환경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한번 종합해서 조정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더니 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답이 왔는데요. 총리님, 답이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별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그럴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7월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총리님, 그때 기억나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정두언 의원 그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구체적인 것까지 다 일일이 지금 바로 기억은 안 나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해 주셔야 기억을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았고 격론이 벌어졌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회의 자료하고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외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균형발전사업이 국가안위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왜 대외비인지, 왜 못 주겠다는 것인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혹시 공개 못 할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가…… 하여간 문제가 없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명확하게 다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아직 입안이 되지 않은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래서 아마 정책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들어있는 경우가…… 그래서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지금 총리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야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3월 30일 감사원은 산자부의 이와 관련된 사업인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3개 사업 중에서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이 사업 타당성이 없고 목표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또 지난 4월 1일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지역활성화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아주 동일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실에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자료를 다시 국회예산정책처에 넘겼더니 예산정책처에서 상당수 사업이 타당성이 없거나 중복성이 많다 이렇게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지난 7월 26일에는 총리께서 주재하신 국무회의에서 산자부장관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사업이 막대한 돈을 들인 데 비해 사업의 효율성이나 성과는 크게 미흡했다, 그리고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유기적인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전체적인 보고서의 큰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어떻다라고, 뭐가 뭐하고 중복되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구체성을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두언 의원** 저도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토 난개발은 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 파괴 또 투기장화, 예산 낭비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면 심각하지요.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난개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정도의 개발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안 하게 되면 결국 지역은 거의, 그러니까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하되 친환경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계획적인 개발을 한 분당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둔 용인 풍덕지구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계획을 해서 개발한 분당 지역이 환경으로 보나 도시계획의 형태로 보나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친화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서 수용되지도 않고 또 주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개발 자체가 여의치가 않고…… 친환경적으로 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두언 의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기관이나 민간연구소에서 타당성이나 중복성에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물론 이것은 당연히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 같은 난개발 가지고서는 그 도시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정두언 의원**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정두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75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수도권분할법이 현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곧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또 다시 위헌 판결이 난다면 이 공공기관의 이전도 전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원래 행정중심도시하고 공공기관 이전은 서로 국토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이 같이 이루어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중심도시에 대한 현재 소송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현재 결정에 따라서 수도로서의 성격에 관한 것을 전부 배제하고 행정 기능의 일부를 옮기는 것, 다시 말해서 과천에 있는 것을 공주·연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법무부는 광화문 쪽으로 오고 총리실이 가는 그것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로 그 정도이고, 그곳은 이미 각종 정부 산하의 청들이 가 있는 대전하고 가까운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런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현재까지로 봐서는 위헌결정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모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적자예산이지요. 앞으로도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제가 대정부질문을 한다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하면 가서 꼭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돈 팡팡 쓰고 또 세금 마구 거두어들여 가지고 하면 누가 그런 것 못 하겠느냐고, 나도 가서 하겠다고 꼭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간 최근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확보가 안 되었다고 총리께서 마구 화를 내셨다고 언론에 나왔는데요, “경제부처 1급들 손을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1급들 손을 보셨습니까? 지금 그 후에 아무 얘기가 없어 가지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구조조정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는 구조조정 이런 것을 거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 정도의 예산이 일부 지금 중장기 계획보다는 좀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재원 대책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세 부분과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두언 의원** 그러니까 두고 봐서 손을 봐야겠다는 얘기네요? 제가 그걸 꼭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두언 의원** 그때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기존 예산 5%를 줄여서라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 관계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한 9.3% 정도로 구조조정을 이미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런데 제가 장관께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좋지요.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 총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없

앨 것은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쓰라는 얘기인데, 구조조정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을 없애거나 줄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총리께서 지금 제가 볼 때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출절약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그렇습니다.

**○정두언 의원** 지출절약은 예산성과금 규정에도 나오니까요. 그렇지요? 지금 정부에서 그냥 사업을 있는 그대로 하면서도 줄이는 노력을 얼마만큼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 부분의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부분 쪽으로 옮긴 것을 말한 것이고요, 그것이 내년도 예산의 한 10%쯤 되고 또 각 재정사업을……

지금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사업, 개별 사업을 자율적으로 부처가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금년부터 도입해 가지고 지금 각 평가를 해서 미흡한 사업은 전부 다 삭감을 합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만 4000억 정도 절약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처우개선을 금년도에는 동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 정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정두언 의원** 장관님, 제 말은 인건비나 이런 경상경비 말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제가 성과금 규정을 보여드릴게요. “업무의 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얼마나 됐는지……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그것이 한 4조 원 정도 된다 이것이지요.

**○정두언 의원** 얼마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4조 원요.

**○정두언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게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4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을 전체적으로는 한 45조 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절감하고, 바꾸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 45조 원 정도가 대상인데 그중에 한 4조 2000억 정도는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 액수에는 예산사업을 없애거나 줄인 것이 대부분이고 사업을 그대로 집행하면서 줄인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액수가 저한테 와 있는 것이 7년간 5276억이라고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도 상당히 구조조정 액수가 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보내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민선 3기가 시작되면서 예산의 구조조정이 아니고 지출을 절약해서,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지출을 절약해서 3년 반 만에 2조 3150억의 예산을 절감합니다. 이것이 매년 본예산의 6.4%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하철 부채를 갚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빚이 늘어만 가는데 서울시는 이렇게 절약해서 빚을 갚아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를 테면 독거노인을 지원하는데 자원봉사를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한다든가,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신공법을 도입한다든가 또 계약심사과를 새로 신설해서 원가분석이나 심사과정을 선진화시켜 가지고 절감을 합니다. 이르기 위해서 조직도 바꾸고, 외부 인사도 영입하고 직원 연수도 실시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 가지고 그런 결과가 여기 책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장관께서 이것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특별히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봤더니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생각하신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요.

이러다 보면 저는 그냥 사업은 다 하면서 5% 절약은 아주 가능합니다. 그러면 1급들 손 안 봐도 되고요, 총리님 지시사항 이행해도 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그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한 게 제가 평가를 낮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정부재정이라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재정의, 실제로 쓰는 쪽을 보

면 한 65% 정도가 지방에서 씁니다. 그리고 각 중앙부처가 직접 사용하는 게 35% 정도 되고 40% 가량 되는데 각 지방에서도 지금 각 개별 자치단체는 그 정도 수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각자 그런 종류의 낭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런 절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수사례가 선정이 되면 성과금을 지불을 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금을 지불한 사례 같은 것은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발행해서, 얼마 전에도 발행되어 있습니다. 마는 또 각 부처나 각 지자체에 보내서 그런 사례를 모범삼아서 지출을 절약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 사례를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예,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은 국회의장단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 자세,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정부 측의 답변 자세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의 답변태도는 너무 심합니다. 국무총리는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나라의 큰 어른이십니다. 이런 분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민의 대표한테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계속 드러냅니다.

참, 국민이 보기에 안 좋고요,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저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을 때 정부 측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했던 사람 중의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런 분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참 답답한데요.

저는 이 문제가 개인의 인격 문제라기보다도 총리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격(國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국회의 권위에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무위원들이 저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저것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의장석에서 제재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요. 그런데 17대 들어와서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17대 국회의 특징 중의 하나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의장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정말 강력히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정두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충주 출신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쌀 협상 국회 비준, DDA 협상, 쌀값 대폭락, 외국 농산물 범람, 중국산 전 쌀·김치 등으로 오랜만에 농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돌아올랐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벼가마를 쌓아 놓고 야적 투쟁을 벌이거나 불을 지르기도 하는 등 농민들의 시위 장면을 생생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농민들은 바로 국회 앞에서 지역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들리고 그것이 분노로 이어져 언제 대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모두 농업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농업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년간 국가재정 운영계획,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 중 농업예산 비중이 타 부문에 비해서 매우 약하며 정부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WTO가 인정하는 감축대상 보조 규모,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낮고 거꾸로 농가부채는 최근 4년간 32% 증가하여 농촌을 빚촌이라 부르기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 정부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들이 농업에 무관심하다고 봅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도, 대표연설에서도, 언론에서도 농업 관련 부분은 잘 다루어지지 않으며, 농림부는 재경부, 기획예산처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민들의 소외가 좌절과 분노로, 쌀 협상 비준 반대로 이어지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계층에 대해 농

민들은 차라리 그들이 우리 편이다 하는 식으로 휩쓸리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뿌리와 과거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도층이 경제대국이다, 첨단산업이다 하며 뿔내는 동안에 농업, 농촌은 그늘에 가려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비싼 농사짓지 말고 싼 외국 농산물 사다 먹으면 이익인데 참 골칫덩어리야, 희망 없는 것을 가지고 보채기만 한단 말이야’ 하는 식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IT, BT, 대기업, 첨단산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농업의 연장산업에 불과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농촌의 유능한 사람들이 이주해 만든 도시입니다.

서울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농민의 아들, 딸들이요, 그 손자들입니다.

최근 전자제품 등 수출이 왜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외국 농산물 수입을 전제로 우리 농업의 희생하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첨단산업의 일정 지분은 농업의 몫이며, 잘 사는 대도시의 일정 지분은 농촌의 몫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농업, 농촌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논리가 나옵니다.

WTO 체제의 냉엄한 국제 경쟁에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으려면 농민들 수준이 적어도 영어에 능통하고, 외국 경험 풍부하고, 석·박사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정부, 지도층, 대기업들이 메꾸어 줘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농업 문제는 앞서 여러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농촌 출신이시고 누구보다 농촌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농업, 농촌 현실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민들이,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기반사회까지 오기까지 한 4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도 농업 인구가 많고, 또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석 때나 명절 때 많이 찾아가는 것처럼

도시와 농촌의 관계가 대단히 유대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점에서 농촌에 대한 애정들은 누구나 다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보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촌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농촌과 농민과 농업 이 세 가지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 사회를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보고, 또 우리가 농업으로서의 가능성 있는 부분하고 가능성이 적은 부분을 나누어서 봐야지 이것을 자꾸 혼재해서 보다 보니까 재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개선 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시종 의원** 2년 전에 119조 원의 농업, 농촌 종합대책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와는 달리 지금은 쌀 협상, DDA 협상, 쌀값 대폭락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과거에 수립한 이런 계획들을 전면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원래 119조라는 것을 가지고 종합대책을 만들 적에 이런 쌀 협상이라든가 DDA 및 FTA 협상에 대비해서 119조를 가지고 종합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불제라든가 농가부채 경감이든가 이런 것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119조 이후에 새로운 상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은 예상치 않았던 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하면 여건을 보완하겠습니다마는 기본 구조는 그 틀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지금 한국 농업의 생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는 DDA 협상입니다. 최근 쌀 협상 국회비준 문제로 온통 우리의 힘을 다 쏟고 있는데 당장 12월로 다가온 DDA 협상은 쌀뿐 아니라 농업 전반에 관한 아주 중대하고 시급한 협상입니다.

1452개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한 관세 상한제 설정,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 개도국 지위 인정 등에 대해 우리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때입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한국 농업은 순식간에 대재앙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DDA 협상과 관련해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대외 경제

장관 회의는 지난 7월 단 한번 열렸고 정부 대책 회의도 과장급들로 네 번 열린 게 고작입니다.

더욱이 DDA 협상의 수석대표가 농림부 국장입니다. DDA 협상의 중요성으로 봐서 총리께서는 DDA 협상 진행 상황을 직접 챙겨 주시고 수석대표를 경제부총리로 격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석대표가 실무급 회의가 있고 각료급 회의가 있는데 각료급 회의에는 장관급인 우리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국장급들이 참석하는 실무급 회의에는 농림부의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DDA 협상이 금년 12월에 세부원칙까지 타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 12월에 DDA 협상이 타결이 안 될 경우에 쌀 협상은 금년 한해 동안 아무것도 이행한 것이 없게 돼서 쌀 협상이 무효가 되고 자칫하면 자동관세화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수차례 아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UR협정 이후에, 1994년도이지요, 그때 이미 이 로드맵이 정리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쌀 협상 결과를 우리 국회비준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얻은 권리를 포기한다면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간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주장과 또 정부의 인식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시종 의원** 만약 12월에 DDA 협상이 타결되어 이에 따른다고 할 경우에도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100% 이내의 관세 상한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쌀이 무제한 들어오고 가격도 한 가마에 8만 원 정도로 판매될 수가 있다, 그러나 쌀 협상 국회비준을 빨리 끝내서 관세화가 유예되면 쌀도 최소수량만 수입하면 되고 또 이것도 국내 쌀 가격 수준인 한 가마 16만 원까지 마크업을 부과해서 판매함으로써 우리 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금년 12월까지 DDA 협상이 타결이 안 될 경우 그 결과를 본 후에 내년 1, 2월

에 가서 쌀 협상 기준을 할 경우에 상대국들이 이런 일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이것은 상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 간에 약속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겠으니깐 당신들은 인정해 달라 하는 것들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 상식인 것 같습니다.

○이시종 의원 인정을 안 해 주면 자동관세화로 가는 것입니까?

만일 12월까지 쌀 협상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들이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상대국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미국이나 캐나다, 인도, 호주 등 협상 대상국들은 이미 우리의 약속 의무이행 절차를 예의 주시하고 또한 각종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9월 22일 2005년도부터 우리가 시행해야 할 MMA 수입과 소비자 시판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의 계획들을 문의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시종 의원 금년 12월까지 DDA 협상이 타결된 결과가 쌀 협상 결과보다 훨씬 불리하다고 해서 내년 1, 2월 가서 우리 마음대로 쌀 협상을 따르고 또 유리하다고 해서 DDA 협상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시종 의원 DDA 협상 예상 결과와 현재 쌀 협상 결과를 비교할 때 장관님께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DDA 협상 결과와 쌀 협상 결과를 비교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DA 협상 자체가 어떻게 타결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불확실 속에 있습니다.

다만 DDA 협상의 성격이 높은 관세를 기본적으로 대폭 낮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수입 쿼터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DDA 협상 결과에 우리의 쌀산업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획득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얻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쌀 협상 기준을 한다면 언제까지 최소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기본적으로 쌀 협상 과정 속에 다른 나라와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는 데, 이행하는 데 걸리는 행정적 기간만 해도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될수록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기준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시종 의원 다음은 쌀값 대폭락의 책임 문제인데 저는 이것을 정부 책임이라고 봅니다. 당초 공공비축용 매입가격을 지난해 수매가격보다 5% 정도만 낮춰 매입했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20% 정도 낮춰 매입하는 바람에 폭락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 폭락의 선도 역할을 농림부가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40kg 포대벼를 4만 7000원에 한 것은 수매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나누어 준 우선지급금입니다. 직접 보전을 포함한 그러한 소득 보전에 관한 것들은 3개월간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선지급금이 어떻게 기준가격이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과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시종 의원 지금처럼 약 20% 가까이 하락한 상황에서 추가 재원만—직불금 얘기입니다—1조 2000을 합하면 모두 2조 원 이상의 직불금이 필요할 텐데 재원 대책은 있는지 그 막대한 재정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이것은 정부와 농민 간의 약속입니다. 양곡제도를 바꾸고 지난 4월에 양곡관리법 자체를 통과시킬 때 농가들의 쌀 소득을 정부는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아무리 많이 벌어지고 재정적 수요가 들어가더라도 정부가 농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리라 보고 또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의원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쌀 유통량은 작년보다 207만 석이 부족해서 내년 봄에는 쌀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농협과 민간 RPC는 엄청난 차익을 챙길 것이고 2조 원이 넘는 정부 재정은 생산자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에게 가는 것

도 아니고 도정·유통 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서 잘못하면 그들만 때돈을 벌게 해 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농협과 민간 RPC가 때돈을 벌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은 가정이고 정부는 이렇게 많은 가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시종 의원** 장관께서는 지금이라도 가마당 최소 5000원 정도 상향 조정하고 농협과 민간 RPC로 하여금 5000원 상향 지급하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공공비축재의 도입 기본 목적이 시중가격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5000원 이상으로 값을 정한다, 4500원 이상 정한다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시중가격과 목표가격과 차이를 줄이는 데는 정부가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시종 의원** 올해 충주시 한 평범한 쌀 농업인의 영농 성적표를 한번 봅시다.

이분이 소유한 논은 3000평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의 연간 수입이 645만 원, 지출이 352만 원, 순소득 292만 원입니다. 여기에 직불금 137만 원을 보태면 430만 원이 총소득입니다. 대출 초임 연봉이 평균 2520만 원인데 1년 내내 농사지어서 얻은 소득이 그들의 17.6%에 해당합니다. 농민들이 느낄 좌절감을 함께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물겠습니다.

엣그제 부총리께서는 음성에 가셨다가 농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신 점에 대해서 충북 출신 의원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요즘 농촌의 민심이라는 것을 고려하시어 부총리께서는 농민단체 요구사항 중 반영이 안 된 사항들, 아마 오늘 3시쯤 발표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 또 화끈하게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오늘 3시에 농림부 차관이 발표를 했고 그 발표는 정부 내에서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국무총리께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내용에 대해서 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그 내용은 아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다면 상호금융자금 상환 연장, 농지구입자금 금리 인하, 농지은행사업 확대, 정책자금 대출금리와 같은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농민과 농민단체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현행 임대주택 제도를 도시에만 적용하고 농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의 평등권 위배라고 보는데 내년부터 농촌에도 임대주택 제도를 전면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그동안 공공 임대주택은 주로 도시 내 무주택자인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농촌보다도 더 임대수요가 집중되어 있고 또 주택사정이 열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촌형 임대주택 제도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총리께 다시 물겠습니다.

수입농산물 검역의 의미는 첫째는 국민건강 지킴이고, 둘째는 국내 농산물 지킴이 역할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검역기관은 하나로 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5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역기관 통합 일원화 문제는 전부터 주장해 오던 것인데 현재 비검사·비연구 인력 30%를 줄여서 이를 통합해 갖고 검사·연구인력에 투입한다면 검사·연구인력이 600명 정도 늘어나고 검사·연구 예산도 400억 정도 증액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총리께서는 이를 통합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동안에도 검사기관과 인력에 관한 일원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수입농산물의 증가 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과 체계 인력 또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조정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 대책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쉼



새없이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식품안전기본법에 되어 있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조직 체계 기능 통합 조정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현재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정하는 차원으로는 미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총리께서는 대응단을 내리시어 하나로 통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행복도시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불후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복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 건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접근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복도시로 가는 길이 서울 가기보다 오히려 더 불편한 지역이 강원권·충북 북부권·경북 북부권 등 3개 지역이라고 봅니다.

강원권은 춘천·강릉에서 원주로 와서 충북 북부권인 충주·청주를 거쳐 행복도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경북 북부권은 영덕·안동에서 상주를 거쳐 행복도시로, 울진·영주에서 문경을 거쳐 행복도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 완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수정 작업 중인 4차 국토종합계획에 장관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 행복도시가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행복도시건설단에서 전국 접근성 및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연구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강원권·충북 북부권·경북 북부권의 교통망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선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4차 계획의 반영 여부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건설교통부가 국가기간교통망에서 세븐 바이 나인 고속도로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디서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꼭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신항만 개장이 불과 두 달 남은 상황에서 해수부는 아직까지도 신항만 명칭을 결정하지 못해서 사실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분명히 국가 항만인데도 해수부는 마치 부산이나 경남도의 지방 항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신항만 명칭을 결정해서 지금 발표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에서는 양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워낙 양 지자체의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양수산부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더 수용이 가능하겠다는 판단 때문에 현재 총리실에 계류 중에 있고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의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약 10년 동안 부산신항이라고 하는 사업 명칭을 사용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하여 국내 외적으로 항만 이용자들로부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만 이름이 결정될 때까지는 부산신항이라는 사업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항만 명칭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신항의 개장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시종 의원 항만에서의 노무공급 시스템 개선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항만 노무공급 체제의 개편 문제는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우리 국가가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될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여러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지난 5월 6일 노사정 간 협약을 체결해

서 현재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폐지하고 앞으로 상용화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합의를 본 것은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체결되고 난 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 노조 측의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항만 노무공급 체제 개편에 관련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것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때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를 초월하여 우리 국가의 물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필히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시종 의원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공기업 문제는 언론이나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수없이 나와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대적인 수술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공기업 간에 적용 법률도 다르고 관리 체계도 서로 다르고 통제 기능도 미약하다 보니까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이 이렇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직무유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공기업이 이렇도록 방치한 정부가 오히려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가 된 것 아닌가, 장관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기업 부분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99년 이후로 최근에 들어와서 목표를 주로 민영화하고 자율화를 두 가지 축으로 두고 해 왔습니다.

자율화는 결국 책임이 굉장히 따라야 되는데 상응한 책임이 별로 따르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 체계가 굉장히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의 관리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범위에 대해서 작업 중에 있고, 두 번

째는 경영 정보가 굉장히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상호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지배구조 문제는 각 나라별로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OECD에서 몇 년 동안 연구한 결과 지난 4월 말에 기본적으로 소유권 행사는 집중화시켜야 된다, 개별적으로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런 권고안도 발표되고 주로 내용은 외부 감독 기능을 집중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지배구조 개선 대책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달 이내로, 11월 말까지는 시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거치고 각계의 여론을 수집해서 최종 정부안으로는 금년 말까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쯤 가서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그때까지 법안이 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시종 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개혁 방안을 만들어서 빨리 입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60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모순과 대립 속에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한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불과 60년 만에 아무 자원도 없고 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예는 동서고금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해방 후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 6·25, 4·19 혁명, 5·16 쿠데타, 유신, 5·18 민주화 운동, 87년 6월항쟁 등 수많은 격변과 시련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제 대국이 되었고 IT·BT 등에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황우석 박사 같은 세계적 석학들이 속속 탄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모두 부정하는 속에서도 우리 현

재는 아주 몇몇이 존재해 있고 역대 대통령을 크게 존경하지 않는데도 그분들이 통치한 이 나라는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역대 대통령 기념관도 없고 동상도 없고 초상화가 담긴 지폐 한 장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기이한 현상인데 이는 과거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고 현재의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는 눈이 다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는데 우리의 현재는 과거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데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과거와 대화합시다. 현재의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과거의 유산이며 과거의 연장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작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총리께 역대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거나 동상을 만들어 한 데 모신 역사공원을 조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건국대통령, 민주혁명대통령, 경제대통령, 민주화대통령, 통일대통령, 개혁과 참여대통령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되 또 부정적인 면은 사실대로 기록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오늘날 가려진 우리의 과거가 있고 과거의 국민들이 있고 과거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모두를 부정하는 것은 그분들을 뽑은 과거 국민들을 부정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이를 외면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자세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요 화합이요 통일을 향한 길이라고 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의 진정한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념하는 종합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 분 한 분 만드는 것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텐데 더구나 역대 대통령 여러 분을 함께

종합기념관을 만들려면 공감대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텐데 현재로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더 역사가 지나가서 완전히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는 모르지만 현재 단계에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국민들 여론을 더 충분히 수렴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시종 의원** 그것을 꼭 기리기 위해서, 존경받아서 만든다는 차원보다도 사실을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까? 사실관개념으로다가……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대통령 중에 역사에 기여하신 분도 있고 또 내란음모로 처벌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자리에 기념관에 모아놓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과연 어떻게 수용을 할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시종 의원**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특히 농업 농촌에 더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이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惠薰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의 이해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경기는 IMF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IMF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세금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점이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세금은 치안 국방 교육 보건 그런 것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내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내는 1인당 세금은 1.5배 늘었습니다. 국민 부담은 1.6배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국민이 받는 공공서비스가 그만큼이나 좋아졌습니까? 불과 5년 만에 세금을 1.5배나 더 내야 될 만큼 공공서비스가 거기에 걸맞게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덕규 부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얼마 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29위

에서 17위로 급상승했다고 정부가 굉장히 자랑한 세계경제포럼 지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에는 그나마 공공 부문의 서비스 경쟁력이 세계 32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만인 2005년에는 42위로 10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이렇게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세금을 1.5배나 더 낸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의 감세안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를 하는 것이 옳으나 감세를 하는 것이 옳으나 이런 거창한 경제이론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지 못했다면 국민 부담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얘기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정부 씬씀이를 충당하기가 어렵다면 국민 부담을 올리기 전에 정부부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솔선수범을 보인 다음 국민들에게 ‘정말 어려운 시기니까 같이 고통을 분담합시다’ 이렇게 호소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많은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 한나라당은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공적자금은 한 푼도 갚지 않고는 임직원들이 인센티브 잔치를 벌인 곳이 많았습니다. 누적 결손을 냈기 때문에 법인세도 못 낸다고 법인세는 유예를 받으면서 임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많이도 받아갔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민간방송사 생산성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공영방송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의 3배가 넘는 임금 인상을 자기들끼리 나누는 그런 공기업과 산하기관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사례가 많아서 여기서 일일이 언급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옛날 정약용 선생님의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곡산의 부사로 계시면서 지방 개혁을 주도하던 시기에 일식삼찬, 한 끼에 세 가지 반찬 이상을 놓고 먹지 않는다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지방 개혁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도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옹호하고 폄하하는 데 들이는 노력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일식삼찬의 모범을 보이는 데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

서 경제를 못 살렸으면 부족한 세수를 국민들에게 떠넘기기 전에 먼저 정부부터 ‘우리가 이렇게 방만한 부분을 잘라 내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신뢰를 얻는 그런 참여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서 총리께서 많이 언론을 통해서 논평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저희 한나라당이 제시한 감세안의 세부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주장에 동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감세 규모나 이런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논평한 것은 감세를 많이 하게 될 경우는 세출구조도 절약을 해야 되는데 세출구조 절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감세할 경우에는 바로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세입과 세출을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한번 논평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후에 여기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감세의 효과가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감세를 주장하는 부분이 약 9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서민층 쪽에 감세되는 양보다는 고소득층 쪽에 감세되는 양이 더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李惠薰 議員**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디서 어떻게 저희들이 세출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안을 제시한 바 있고 또 제가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감세는 저소득층들보다는 고소득층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안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10개 안 중에 8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누가 들으셔도 고소득층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영업용 택시 LPG에 대한 특소세 면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 LPG에 대한 부가세 면세입니다. 결식아동 기부금에 대한 면세입니다. 경형승합차·화물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세입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류세 10%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의 대금 결제를 기간 내에 할 때 세액공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등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의 여부와 상관없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저소득층·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이라고 논란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나머지 2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법인세와 소득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세는 아시다시피 과표, 소위 말하면 법인의 연간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만 세율을 현행 13%에서 10%로 내리는 것입니다. 연간 사업소득이 2억 이하면 이게 대기업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옆에서 볼 수 있는 노래방, 주점, 식당 대부분이 연간 사업소득이 2억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무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각 과표 구간별로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장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요청해 봤더니 2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세무서에서 어떻게 보내 왔느냐 하면 6명을 고용해서 일하는 인형공장, 조그만 가내공업입니다. 집 한 칸 빌려서 하는 곳, 그다음에 종업원 9명을 데리고 하는 콘크리트 만드는 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대기업이 아닙니다. 2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 세수율을 전혀 변동시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을 위한 감세이고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것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소득세입니다. 아마 이 소득세 부분을 총리께서 많이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요. 소득세 부분, 총리가 말씀하신 부분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미만인 과표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9만 원 깎아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이나 그 이상인 소득을 가진 분들에게는 몇백만 원 깎아 주

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가진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전체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 중에서 10만 명만이 8000만 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810만 명이 이 구간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인하해도 사실은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분들이 바로 저소득층과 서민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부자를 위한 감세안이라고 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총리께서 이 시간을 통해 좀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요. 저희 한나라당이 제안한 감세안 중에서 고소득층하고 전혀 상관없는 안들도 있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LNG세나 이런 것은 저희가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LNG세를 그때 높여 나갔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정책위의장을 할 때 제가 조정한 세율인데, 지금 휘발유세와 LNG세의 세율 체계가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LNG 소비는 대폭 늘고 있고 휘발유 같은 경우는 남아서 싼 값에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세율을 조정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으려고 6년간에 걸친 특별법을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LNG 세율을 낮춰서 하게 되면 그 체계가 다시 깨지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에 손을 대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다 보고를 받거나 파악할 수는 없는 처지이고 우리 재정부장관이나 기획예산처에서 주로 파악을 하고 계신데, 하나하나를 놓고서 제가 일일이 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많은 예산을 줄이게 되면, 가령 국세 구조를 줄인다 하면 약 3조 5000억의 지방세가 교부세로 나가는 부분이 자동으로 삭감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

황인데 국세 5조 5000억은 국가재정에서 줄인다 하더라도 지방세 3조 5000억은, 지방재정은 자동으로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교부금을 늘려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국세 자체가 줄고 있는데 교부금을 늘리려면 또 다른 재원을 어디서 또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조 5000억이 아니고 더 많이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를 예결위 차원에서 다 검토해 봐야 되는데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건 국회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증액하는 건 정부하고 동의가 돼야 되지만 삭감하는 것은 국회에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전부 다 국민들 부담을 줄여 주길 바라지 늘리길 바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타당하다, 이것은 정말 세출 삭감과 더불어 세입 삭감이 가능하다고 해서 타당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 이것을 줄이게 되면 결국 세출을 줄이게 되는데 세출을 줄이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국가 경제 전체에 그것이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왜냐하면 세출을 우리가 얼마로 책정할 적에 대개의 경우는 그게 필요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 필요 없는 예산이 책정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판단해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李惠薰 議員** 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9월 26일쯤이었던 걸로, 일은 그렇게 일어났고 보도는 10월에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와 재정부에게 '5%씩 부처별로 예산을 줄여 오면 될 텐데 왜 희망한국21 사업의 재원을 마련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질책을 하시면서 '부처별로 5%씩 줄일 수 있는 낭비성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책을 하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 말씀만 보더라도 총리께서도……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예산을 줄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가령 요즘에는 총액을 부처에다 주고 부처 자율편성제를 하지 않습니까? 톱다운 방식

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부처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규모를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 사회안전망과 저출산, 그러니까 저출산·노령화에 대비하는 예산이 대략 매년 한 2조 정도쯤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강해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게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우선순위로 말하면 현재 이게 매우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맞춰서 다른 부분을 구조조정하라는 겁니다.

○**李惠薰 議員** 그 얘기가 그 얘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안전망 사업 확충을 위해서 3조 6000억 원의 재원을 왜 마련하지 않았냐고 질책하시는 부분이었고요.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우선순위를 내려라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게 바로 세출 삭감이랑 동의어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좀 다릅니다.

세출을 삭감해서 재정규모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세출규모는 대체적으로 잠재성장률 규모로 이어져 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의 선후와 경중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저출산·노령화 사회에 대한 예산 쪽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때문에 다른 쪽의 우선순위를 낮추라는 뜻입니다.

○**李惠薰 議員** 그러시면 일단 줄일 부분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더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

○**李惠薰 議員** 그리고 이 논의가 시작된 지가 한두 해도 아니고 8년째 추경을 하고 있고 '세출이 줄어야 된다, 구조조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이렇게 오래 됐는데 정부에서는 정부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떤 항목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불안도 없으시고 파악해 보신 바가 없으십니까? 그냥 '국회에서 줄여라, 국회가 줄일 수 있는데 왜 정부가 줄이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런 게 아닙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작년에도 자율편성제를 했고 올해도 자율

편성제를 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작년에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5% 정도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5%가 조금 더 넘는 걸로, 9점 몇 % 구조조정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부처 내에서 자율편성을 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을 우선순위가 높은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된 예산에서 세출을, 가령 우리 정부가 추계해 본 걸로는 12조에 가까운 걸로 돼 있고 한나라당에서 말씀하신 것은 약 9조에 가까운 걸로 돼 있는데 그 정도를 다시 세입을 줄이려면 그 편성된 예산 중에서 세출예산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李惠薰 議員 세출 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될지 지금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고 복안을 갖고 계신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 5%를 조정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2004년 결산을 해 보니까 불용액이 7조, 이월액이 4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장 급하게 그해 예산으로 굳이 배정해서 갖고 가지 않았어도 되는 돈이었다라는 뜻이지요. 이것만 합해도 11조가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8조 9000억의 감세를 얼마든지 수용하고도 남는 액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총리께서 아까 부처마다 5% 정도 줄일 수 있는 낭비성 예산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다면 부처마다 5%하면 그게 11조 700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다 못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공기업이 얼마나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봤더니 너무나 많은 슬랙(slack)들이 있습니다.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은 100% 정부출자 은행입니다. 그런데 정부 돈으로 장사를 하는 산업은행이 당기순이익이 1조 5000억씩이나 나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낡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민간 부문에서도 배당을 하고 있는데 그 배당 성향만큼 배당을 한다고 치고 그리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영목적이 조금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봤더니 총 공기업으로부터 1조 4000억의 배당을 현재보다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정부가 하시는 사업을 축소하라는 얘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업을 축소하지 않고 각 사업은 그대로 하되, 소위 말하는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방법만으로도 4조 5000억이 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를 다 냈습니다. 총리께서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공적자금이 11조나 투입된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임원 평균 연봉을 4년 만에 2.3배를 올렸어요. 직원 평균 연봉은 3년 만에 2배를 올렸어요. 그리고 공공부문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3%를 몇 배나 초과한 것은 물론이고요, 같은 금융기관이 민간 부문에서 종사하는 금융기관들보다도 몇 배로 임금이 높습니다. 상승률이 높고요. 기관장 연봉이 7억 5000이나 됩니다.

어떻게 국민의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고 공적자금을 상환도 안 하고 11조나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하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을 안 하시고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단속을 잘 하셔도 상당부분 국민의 세금을 깎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 부문이, 사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재정지출을 줄이게 되면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저도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세가 효과적이나, 재정 확대가 효과적이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시기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8년 동안이나 추경을 하면서 경기진작용 추경을 편성해 왔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봐서도 이게 더 이상의 효과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사실 재정 확대라는 것은 단기간에, 스테로이드 제제처럼 아주 극약처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금방 효과가 있지 않으면, 이게 자꾸자꾸 계속될 경우에는 내성이 생겨서 결국은 그 내성 때문에 더 이상의 효과가 없어지는 방법이라는 뜻이잖습니까? 그리고 벌써 8년이나 했다는 얘기는 내성이 생길 만큼 생겨서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

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진작을 기대할 때는 자본지출 비율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민간의 투자생산성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지출 중에서 경상경비와 자본지출 비율이 24%에서 13%로 5년 만에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경직성 경비가 많은, 경상경비 지출이 이렇게 많은 구조를 가지고는 아무리 재정지출을 확대해도 총리께서 기대하시고 부총리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경기진작의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야말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로 터닝포인트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굉장히 빨리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정리를 못 하겠는데요,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중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게 낫냐, 감세를 해서 민간투자를 더 유도 하는 게 낫냐 하는 것은 제가 예결위를 해 본 지가 오래 됐는데 그때부터 매번 논의되는 것인데 그 얘기를 여기에서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참여정부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한 부분은 사실은 2003년도 그렇고 2004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수가 예정보다 적게 들어 왔지요.

그래서 세수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는 정도의 추경, 그다음에 2003년도에 태풍 피해가 아주 혹심해 가지고 그때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정도의 추경, 그러니까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차원의 추경은 별로 많이 안 했고요. 올해도 4조 얼마입니다마는 그것은 세수 결함 부분에다가 최소한의 부분, 필수적인 부분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그렇게 재정지출 확대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는 오히려 성장률이 좀 떨어져도 재정지출을 확대하지 않고서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조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

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에서의 배당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렇게 어려워도 공기업들로부터 배당을 많이 안 받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공기업들은 배당해 주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 다른 투자사업을 계속해 나가면 그게 공공서비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투자사업을 해 나가는 것도 배당을 받아서 정부가 사업예산으로 쓰나 공기업이 사업을 하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실제로 배당을 안 함으로써 생기는 경영의 방만함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3000억 정도는 더 배당을 받는 것으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은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사안들은 하나하나 답변드리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사안들이 많아서 다시 정리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惠薰 議員** 감사합니다, 총리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총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재정지출을 참여정부 들어와서 별로 확대하지 않았다 그러셨는데 사실 경제성장률의 1.5%포인트나 증가하는 수준으로 재정이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백 마디 말보다도 재정은 확대로 운영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정부가 국회에 가져오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번 추경을 꼭 해주십시오, 경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적어온 부분을 제가 다 체크해 봤습니다.

98년에 두 번을 그렇게 해 오셨고요, 그다음에 2001년에 두 번 그렇게 해 오셨고, 2003년에 두 번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건 국민의 정부 때이지요, 참여정부에 와서는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李惠薰 議員** 2003년도에 2회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때는 태풍 피해가 아주 극심해 가지고……

○**李惠薰 議員** 태풍 매미 피해는 두 번째 추경이고 첫 번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렇게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제가



시간을 거의 다 써 버려서 부총리께 질문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총리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리께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정책위 의장도 하시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굉장히 의욕 있게 추진을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또 공공 부문의 방만함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인력감축을 2001년 말까지 3만 5000명 하겠다 이렇게 공언도 하시고 그다음에 감축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언하셔서 다음 그대로 하신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만큼 3만 5000명까지는 감축이 안 됐지만 1만 5000명 정도 상당히 감축돼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국민들 세금 내기 어려운 시기이니까 총리께서 그때 심정을 다시 살리셔서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공기업이요?

○**李惠薰 議員** 공기업과 공공 부문, 산하기관들이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과를 제가 다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공기업도 전보다는 방만한 경영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개선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惠薰 議員**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부자들을 위한, 2%의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이라고 폄하하지 마시고 같이 힘을 합해서 정말 국민들 부담 줄여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이해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대정부질문을 하기 전에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소 등 많은 연구소에 경제자문을 구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하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년부터 5%의 경제성장률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정부가 끝나는 2007년도에는 1만 9500불 정도의 소득은 예정될 것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이 싸우지 않고 일로 매진하여 합심한다면 2만 불 가까이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안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약 263조, 그다음에 산하단체는 187조, 총 450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냐는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돈, 즉 경제가 어디 있는냐는 돈이 어디 있는냐인데 2599조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느냐를 가지고 질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국가통합지능망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정기적으로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쿠빌라이칸은 광범위한 지도수집을 통해서 전 세계 정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각종 금융회사 정보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의 기업 데이터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가 이 신용정보를 달라고 하니까 정보센터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서 정보제공을 거절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중기청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의 종합적인 전국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처와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범국가적인 지능망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우리 IT 기술이, 특히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발전해서 여러 데이터 베이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정보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은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도 형사통합정보 이 부분도 통합정보 체계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금융에 관련된 부분, 금융 또 신용평가 이런 부분도 통합전산망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

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각 조직이라든가 부처의 이기주의가 있어서 쉽게 자료를 안 내놓으려고 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외에 약 2000여 명의 외교부나 KOTRA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2000명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종합적인 정보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상호 정보교환이 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해외정보공유망을 시범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해외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변해 가고 그것이 디지털화되어야만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취약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정보공유망을 시범운영 중에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해 가야 되는데 여기에 외교통상부만이 아니고 KOTRA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그다음에 전산망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 간의 정보공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기관이 흩어져 있지 말고 가령 코리아타운이나 트레이드센터 같은 건물에 KOTRA, 중진공이 들어가 있다면 훨씬 정보교환 속도도 빠르고 지식을 창출해 나가는 것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은 위치가 같이 있느냐 하는 것은 예전하고는 그 의미가 달라졌지요. 원래 IT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 좋은 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것이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데 그런 점은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같이 모아놓을 때 따르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경우에는 너무 고립되는 양상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식경제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서 약 300명의 과학자를 모아서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정책이나 산업이나 학계의 전문지식이 결합된 거대지식을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한 국가의 부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지식국력은 미국의 5.9%이고 일본의 14%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 중에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인구가 우리 세대보다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아무래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다음 세대들 개개인의 여러 가지 지적인 능력 그리고 그 능력들을 다 모아서 이루어내는 사회적인 총량, 총 능력이 부분을 길러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우수하게 기르고 그 우수한 사람을 우수한 집단으로 만들고 또 경쟁력 있게 만들고 유기적으로 체계를 만들어주는 인적자원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지금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구성을 하려고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 왔습니다. 금년 중에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또 하나는 엘리트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료집단은 학계 보고 현실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고 학계는 관료집단에 대해서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 학계, 재계, 연구소의 인력이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한테 굉장히 부족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싱크탱크 집단과 정부 간의 인력 교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회전문 현상을 통해서 정책의 실패 가능성이 최소화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이 부분이 우리 사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지요. 지금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해도 사실 그 정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학계와 기업 사이에 오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쉽지가 않고 또 관료, 학계, 그다음에 기업, 정당 이런 쪽의 순환이 잘 안 되는 폐쇄적인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도 제도이지만 하나의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오랜 종신고용 체제, 신분보장 체제 이게 죽 골간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환류 체계가 더 유연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기업에도 파견하고 정부기획단 업무에 기업 쪽에서 파견받기도 하고, 극히 부분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환류 체계는 크게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광재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중앙, 지방과 그다음 산하단체에서 450조라는 돈이 과연 투명한 회계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국가재정 정보시스템과 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기획예산정보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3개로 나뉘어져 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예.

○**이광재 의원** 그런데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를 먼저 통합하고 2단계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시스템을 통합할 예정으로 돼 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 의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유지·보수, 그다음에 시대 상황에 따라 보완이 필요할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것을 법령으로 명시해서 법률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 재정정보시스템이 부처별로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중앙과 지방이 다르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시간 파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와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획단을 발족해서 지금 구축 작업을 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 말까지 완성을 해서 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사실은 07년 정도까지만 기획단을 존속시키는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07년까

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결국은 정부 회계의 정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톱다운 방식하고 BTL도입 방식이 예산운용 방식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예.

○**이광재 의원** 그런데 이것이 재정의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이 충돌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관리방안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는 옛날에 구 경제기획원이 있고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정부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각 분야별 단기 또는 각 부분별 중장기 계획하고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혼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 9월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이미 각 부처에 통보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법적인 뒷받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국가재정법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 국가재정법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상에 그것을 완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회계 기준과 관련하여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하나가 460조의 정부회계라면 또 하나는 기업회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회계의 국제화 방안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것은 역시 IMF 외환위기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투명성, 회계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이 마음 놓고 들어오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을 국제적으로 정합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99년에 회계연구원이 설립되고 또 국제 회계 기준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에 기업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 회계 기준을 그대로 전면

수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국제 회계 기준의 적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그러한 기준을 좀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적용을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입니까.

또 하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기업회계 기준을 도입하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로 가령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시장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투명화 속도를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한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어느 기업이 국제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자본시장에서 평가가 우선적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다음 부총리께 공공요금 산정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공공요금 산정 기준은 82년도에 제정되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 의원** 그래서 그것이 부정합하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 의원** 그런데 여기에 재정부 기준과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광역상수도요금이 다 다른데 이 부분을 현실은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통합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의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특히 이 기회에 지적을 해 주셔서 공공요금 산정에 있어서 재경부가 직접적인 주무부처는 아닙니다. 그러한 기준에 대해 일

관성을 갖도록 개편하는 작업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쓰는 약 263조는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지자체가 호화 청사를 많이 지었다든지 그다음에 축제의 경우에 94년도에는 287개에서 04년도에는 1178개로 310%가 급증했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성이나 선심성 예산의 실태는 어떠하고 이의 개선방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완전히 점검을 잘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행자부에서도 지방자치 분석 제도를 개편해 가지고 나중에 교부세 차등 지원이든지 이런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지역축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복되고 낭비요소가 있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금년 6월부터 내년에 걸쳐서 실태를 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안에, 행자부나 문화관광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기획예산처도 그동안에 주로 예산 편성을 위주로 하던 것을 그쪽 사람은 줄이고 성과관리 이런 쪽으로 사람을 재배분해 가지고 지난 6월부터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낭비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전부 다 조치 내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본 의원이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행자부에 했을 때 이것을 6개월 동안 추적했는데도 제대로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매칭펀드 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는 사업 확보가 쉽고 열악한 지방자치체는 매칭펀드니까 결국은 사업 확보와 예산이 어려운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자치단체별로 굉장히 심합니다.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부금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교부금 가지고도 해결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근 30개가 넘는 곳이 거의 노령인구로만 구성돼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등을 해야 되는데 차등이 어려운 점이 전부 주지만 줘야 되고, 그러니까 보조만 더 많이 해 줘야 되고 적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좀더 강구해 보고 지금 굉장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 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정확한 사업에 쓰고 있는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국가사업의 경우 5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예.

○**이광재 의원** 시·군은 10억~30억인데 이것은 누가 타당성조사를 하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그 자체에서 하고요.

○**이광재 의원** 광역단체는 30억~200억인데 이것은 누가 타당성조사를 하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그것은 그 지역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실제 인력을 찾아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 없이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과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실제로 예산을 분석하고, 심사·분석·평가할 기능이 없는데 이 인력·기능을 대폭 보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은 빈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지금 사실 그 부분까지는 대책을 세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가로 인력을 늘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의 개편을 통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

산처에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획기적인 인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극화 문제에 관해서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이 정부가 잘못해서 양극화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IMF를 겪은 나라가 구조적으로 양극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밝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양극화 문제는 구조적으로 생기는 문제와 경기 순환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역시 세계가 세계화가 되고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각국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결국 개방과 시장경제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분명히 탈락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 순환적으로는 IMF 직후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가 98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소비도 -13%,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탈락되는 계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조적인 문제와 순환적인 문제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결국 이런 양극화가, 성장을 하지 못한 그 결과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 되어 있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는 두 가지 측면이 다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적으로는 역시 성장하는 경제가 이런 양극화 문제의 부정적인 효과를 좀 적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 양극화 문제가 구조적으로, 양적으로 성장만 한다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탈락하는 계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과 또 여러 가지 복지적인 대책을 해가면서 이분들이 결국 근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아서 좀더 나은 직장, 좀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 그런 쪽으로 원활히 전

환되도록 하는 대책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극화 문제에서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역시 자영업, 택시, 재래시장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해서 각 부처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이 그렇게 쉽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결국 양극화 문제는 한편으로는 성장의 문제이고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저는 동사무소를 사회안전망 정보 관리의 핵심 기지로 만들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앞에 가면 ‘가난한 이웃을 신고 하여 주십시오’라는 플래카드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어떤 동사무소에 가면 어떤 주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고용 상태에 있는지 혼자 사는지 자식과 함께 사는지, 아니면 국민연금 가입자인지,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지 밥을 굶는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 우리가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동사무소가 더 이상의 민원을 발급해 주는 행정업무 중심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최 밑의 말단에서 신경망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 읍·면·동사무소가 주민들의 실태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행정기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동이 아주 많아서 파악하기 좀 어려웠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이동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동이 제일 잘 알고, 동 밑에 있는 통·반장이 또 현실을 잘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일, 그러니까 내년 7월 1일이면 민선자치 제4기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복지 전달 체계, 복지문화적 센터로 만들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보도 관리를 하고 실제 전달 기능도 하는 이런 것으로 체계를 지금 전환시키려고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복지와 고용과 문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그 부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교육이 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대출을 약 30조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교육부와 교육 관계자와 여러 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매년 32만 명의 인구가 집중되고 있어서 학교를 계속 신설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도권과 광역은 얼마나 되고 지방은 과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대략 4년에 약 10조 정도씩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도 10조 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도 약 10조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부분이 경기도 쪽에 집중됩니다. 경기, 인천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그렇습니다. 결국 23조 예산 중에 매년 2조 5000억 정도를 수도권의 학교 신설 예산에 쓰다 보니까 교육재정은 말이 없게 현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학교 신설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공원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 분류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또는 저가로 공급하고, 학교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반시설 부담금을 확보해서 학교 교육 재정을 근본적으로 고치자는 교육계의 강력한 건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공택지 내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과 시설 예산이 필요한데, 여러 차례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용지부담금을 받아왔었는데 그게 현재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용지에 관련해서는 아예 시설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러고도 또 건설비 예산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일시에 공급하는 데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른바 BTL 예산으로 해서 장기 분할 상

환하는 지불 방식 도입을 이번부터 해서 그것으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쪽으로 사업 방식을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교육 예산 중에서 이런 학교 설비에 들어가던 예산을 다른 쪽으로 용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그다음에 학교 전기 요금이 학교 공공요금의 약 50% 이상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해 봐야 학교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못 들어 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요금만은 인하하자고 했고 산자부장관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총리님의 단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실제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학교는 주로 낮에 하고 저녁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낮에 쓰는 양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요금체계가 일반용하고 산업용 사이에 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더 파악해서 산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한전 수익률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지금 가정에서의 환경하고 학교에 와서의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가정은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졌는데 학교에 오면 질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도 그런 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산업용 가격을 적용하면 339억 원, 산업용 평균을 하면 1087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재정의 양극화 문제, 부자 자식은, 부잣집 아들은 더욱 공부를 잘 하게 돼서 출세하게 되는 것이고 못 사는 집 아이는 더 공부를 못 하게 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텍사스 주 같은 경우는 교육격차는 위헌이라는 판결 이후에 모든 학생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부유한 지역에서 나오는 교육재정의 일부를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쓰도록 교육재정법을 통

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의 현실을 보니까, 결국 교사들이 사택이 없어 가지고 애들을 9시 넘게 공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찜질방에서 잔다든지 기숙사가 없고 통학버스가 없으니까 마을에서 자율방범대를 해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주 노후화된 컴퓨터라서 컴퓨터 수업 자체가 안 되는 이런 대단히 어려운 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농특세라는 것을 가지고 1년에 1조 3800, 1조 한 4000억 정도가 농림 예산인데, 농특세 예산을 교육부 소관 예산으로 대폭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글쎄요, 그 부분은, 부처 간의 예산을 전환 배치해 주는 것은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체 잘 안 뺏기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농어촌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수요를 뭘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이 중요한 것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쉽게 내놓을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 농림부 예산이 주로 농가에 대한 소득, 그러니까 농업 생산에 주로 많이 투여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농촌의 복지, 농민의 복지 그다음에 교육·문화 이런 쪽에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어야 되는 큰 전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예, 작년도가 100억이었고 내년이 460억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을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동북아 시대와 관련해서 남북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북한 지원 문제는 우리가 비용적 측면하고 투자적 측면 두 가지가 모두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200만kW 부분에 대한 비용은 나왔고요, 신용등급 1단계 상승 시의 경제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광재 의원**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나누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그러나 직접

적 효과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업과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넘어서 기업이나 민간기업에 신용등급을 부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용등급의 상승에 따른 자금 차입, 그리고 자금 차입의 조건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대개 B등급에서 A등급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단계에서는 대개 한 10억 불 이상 이자의 저축이 된다, 감소가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A에서 A<sup>+</sup> 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 규모는 그것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만한 컨트리 리스크가 적어지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좀더 마음 놓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이번에 피치사가 A에서 A<sup>+</sup>로 올리는 데 있어서는 남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6자회담 내지는 6자회담의 핵심이었던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언제 해결될 것이냐 하는 쪽의 문제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광재 의원**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가기를 원하는데 개성공단의 3단계 조성이 끝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들이 임금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세계화 속에서 감소되고 있던, 악화되고 있던 그러한 경쟁력을 상당히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마스 그것을 정확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러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리 한국, 남한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그렇게 인정받아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생산기대액은 약 83조 90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철도 노선 문제입니다.

제가 올 초에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는 약 400만 불을 들여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원산까지의 철도 노선을 설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원산 이후에 원산에서 철원으로 가는 것인지 원산과 고성과 강릉과 서울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원산과 고성과 부산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노선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검토한 의견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 어제부터 오늘까지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 야쿠닌이 서울에 와서 힐튼 호텔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한 물류라든가 각종 철도 이용 관련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하고 있고 어떤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가, 경제적인가 하는 것들이 검토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한·러·북한이 어느 노선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경원선의 경우 지금 말씀한 원산-철원의 경우에는 한 31km가 미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남측에서는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신탄리 평강까지도.

동해선의 경우에는 이번에 남북 철도에 의해서 고성에서 저진까지 한 25km를 연결시켜 놓고 있는데 실제 저진에서 강릉까지 한 100km 정도는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용해서 해야 될지, 또 추가로 연결공사를 해야 될지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러·북한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광재 의원** 만약에 남북한의 동계올림픽 2014년의 동시 개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고성에서 하나나 2개의 게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철도 노선도 그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 예.

**○이광재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북한에 연탄 보내 주는 운동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북한의 현재 식량 상태는 어떠한고 산림 상태는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구체적 북한의 식량 상태와 산림 상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힘들니다마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북한의 산림은 황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예.

○**이광재 의원** 결국은 산림을 없애고 그다음에 땀감이 없으니까 다시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남북경협에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과거 우리 경제를 보면 중동 특수가 있었고 월남 특수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북방 특수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문제로 보면 산자부 문제, 그다음에 개성공단 문제, 그다음에 농림부 문제, 건교부 철도 노선 문제, 그다음에 북한 바다에서 조업하는 해양수산부 문제까지, 전 부처에 관련해서 남북 문제 부분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북한 경제 재건의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는 정부 내의 기구나 협의체가 보다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자회담이 한반도에 있어서 비핵화의 큰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 후속조치가 이행이 되면서 이제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구체적인 경협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방 경협 TF를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동 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6자회담의 성과와 더불어 보다 발전되어 가겠습니다만 좀더 실질적인 북방 경협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또 지금까지 밑그림을 각 부서에서 그려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금년 말쯤에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총리께

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얼마 전에 주장하셨지요, 그렇지요?

제가 아일랜드,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의 전 사례를 다 분석한 것을 뒤에 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소신을 가지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오늘 아침에도 여성단체들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도 이런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시고 특히 여성단체 쪽에서는 보육에 관한 문제를 좀더 범사회적인 캠페인 차원의, 운동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자라는 그런 제안 말씀이 아까 있으셨습니다.

11월 초까지 각계를 제가 죽 한번 두루 만나서 공통점을 찾아서 큰 사회적 대타협의 틀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지자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는 아직도 IMF를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IMF를 낳은 한나라당 그다음에 IMF 극복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지만 결국 카드 신용불량자와 수백조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민주당 그리고 현 집권 세력인 열린우리당, 오늘 그 어떤 사람도 오늘의 이 경제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분담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력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2005년도 ‘미래 대예측’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17년에 러시아 극동과 알래스카를 잇는 해저터널 공사가 시작되고 러·일 양국은 블라디보스토크 항과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우리 극동에 집중해 보십시오.

두 번째 2035년이 되게 되면 인류가 꿈꾸는 핵융합에너지가 상용화됩니다. 우리가 화석에너지 시대를 끝내고 핵융합에너지 시대로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이제 100살이 넘는 이모작 시대를 만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폴 케네디 교수의 마지막 글로 마무리 하렵니다.

“나의 소박한 견해로는 한국 정치의 최악은 서

로를 적대시하고 정치적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이 서로 반대하는 내전 상황에 빠지기에는 세계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 그들은 한국인이 정말로 심각한 내부 분열에 빠질 여유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고 신이여, 지금은 우리가 다룰 때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이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영천 출신 정희수 의원입니다.

예전에 한 홈쇼핑에서 캐나다의 이민 상품을 내놓자 80분 만에 1000명이 신청해 사회적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민박람회 행사장에는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온종일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해외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해외 이주를 통한 자본 유출 규모가 지난해 2조 원에서 올해는 3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왜 이들이 정든 고국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헌신하려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 힘들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었던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들입니다.

과연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이들에게 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걷은 세금을 가지고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한국의 국민 부담률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체감 고통지수는 매년 증가하고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고통이 아닌 행복으로 느끼게 만드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를 네 가지 부문으로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왜 기업 하기가 어려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기업 규제 양은 늘고 질은 악화되었습니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는 2002년 7700건에서 올해 79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규제품질 순위는 49위에서 지난해 58위로 9단계나 낮아졌습니다.

복잡한 창업 절차,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 해도 16단계를 거쳐야 되고, 구비서류는 37종류에 58개나 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국내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설비투자율은 올 상반기 9.2%로 감소한 반면에 해외 직접 투자액은 지난해 79억 불로 증가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고 외치면서 기업에 대한 대접은 너무나 인색하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의향이 없는지, 참여정부의 기업 사랑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총리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서 민간기업에서 25명이 지금 파견돼서 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정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50명이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서 개혁을 시작해 가지고, 2년 한시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반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라든가 관광단지 조성이라든가 창업절차 간소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 반쯤 했는데 일선에 가서 바로 일선 공무원 선에서 법령이 고쳐지면 일선 공무원이 교육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전달 단계에서 교육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업에까지 전달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피부적으로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 반쯤 했는데 일선에 가서 바로 일선 공무원 선에서 법령이 고쳐지면 일선 공무원이 교육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전달 단계에서 교육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업에까지 전달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피부적으로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희수 의원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률은 2002년 5.3%에서 지난해 4.1%로 감소한 반면에 대기업은 동 기간 9.4%로 증가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소기업 투자 비중이 2002년 28%에서 지난해 20%로 떨어졌지만 대기업은 같은 기간에 79%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해 내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총리,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드는 등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실제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더욱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정책 자금을 추가 조성해서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근원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성격을 잘 분류해서 결국은 중소기업 중에서 장기적으로 역량을 개발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전환을 해 줘야지 그 많은 중소기업 전체를 떠안고 가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부로서는 자금도 지원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한편으로는 자금을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과공유제를 추진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다원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숫자 중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불만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수 의원 국민의 정부 때는 벤처에 특징적으로 뭔가를 나타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차별적인 어떤 뭔가가 있으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국민의 정부 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양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IT 인력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럴 헤저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게이트라는 말이 거기에서 주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게이트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비리라는 단어처럼 쓰일 정도로 거기에서 모럴 헤저드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평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체계화시키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 그다음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이 바로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의원 중소기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10월 현재 7개 시중은행 중 3개가 외국계 은행이고 비외국계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화된 국내 은행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을 확대시키고 부유층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되어 돈 빌리기가 힘든, 즉 ‘돈맥경화’로 중소 제조업체의 30%가 자금 압박을 받는 등 국가 경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7대 시중은행 중에서 외국계가 아닌 것은 우리은행뿐입니다. 만일 이마저 외국자본에 매각된다면 국내 은행 모두 외국인에 의해 장악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질문이 있었습지만, 이 은행은 정부가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총리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명시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희수 의원 둘째,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는 상승하

고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어 서민생활 지표인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2002년 6.8에서 현재 10.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내 내수가 회복되고 있어 경기가 살아나는 중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갈수록 살기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요즘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쯤 국민 모두가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 2004년이 경제성장률이 아주 낮아 가지고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았던 편이고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도 성장률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3/4분기에 들어와서 4.4% 성장을 했는데 2/4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적 성장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4.4%지만 2/4분기 대비해서 3/4분기는 비교적 더 견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권에 어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흐름이 어느 정도 더 가야 서민들한테까지 실제로, 말하자면 경기회복 기미가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민들…… 내수라든지 중소기업 부분이라든지 재래시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도 우리의 양극화 현상 때문에 전달 속도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명시적으로 딱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업의 설비투자가 좀더 늘어나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 서민들은 체감을 하시기 될 것인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정희수 의원** 결국 4.4% 성장률도 잠재성장률 밑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잠재성장률에는 못 미칩니다.

○**정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참여정부 초기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은 성장을 둔화시켜 오히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정책의 실패로 400만 명이나 되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고 사업실패와 생활비 부족으로

소비자 파산이 2002년 1300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 20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 시 가계 부채 증가로 취약해진 중·서민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할 가능성이 큼니다.

총리께서는 근본적인 서민 경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붕괴되고 있는 서민 경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참여정부 들어와서 소득분배 정책에 우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오히려 서민들이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지요.

그리고 또 카드대란 같은 경우도 이미 2001년 2002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카드가 1억 장이 넘게 발행되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2000만이 조금 넘는데 카드가 1억 장이 넘게 발행되니까 그 카드로 돌려막기가 시작되어 카드로 인한 지출이 제 기억으로는 당시 500조 가까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과도한, 말하자면 수요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제·금융·카드위기가 2002년 말부터 오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겨우 2003년 2004년에 들어와서 참여정부가 수습을 했습니다. 수습을 해 가지고 굉장이 컸던 LG카드가 이제 정상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위기를 참여정부가 초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습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옳고요.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는 지금 8·31 조치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인하되거나 세금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대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가구 수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실제로도 매주 모니터링을 합니다만 일본처럼 거품이 확 빠져서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약 2년 전 가격 그런 정도 수준으로 근접해 들어가는 정도로 약간 하락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정희수 의원** 문제는 성장도 분배도 아닌 어설픈 경제에 대한 이념 논쟁으로 성장도 낮고 분배

도 악화된 경제정책 실패를 가져왔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 기준 손익분기점 가구 비중은 93년 7.5%에서 현재 27%로 급증하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임금소득 지니계수 또한 외환위기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2001년 이후 59%대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 2배나 높은 자영업자들은 내수 위축으로 자신들의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 중 23%가 빈민층에 속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 중간 계층의 붕괴 현상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소득 구조, 분배 구조가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오랫동안 가져온 우리의 산업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흐름이고, 더구나 이른바 세계 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도 무역의존도가 독일 다음으로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높은 무역의존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다같이 강화해야 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양극화 부분을 구조적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계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보장을 해 주고 가능한 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소외감을 줄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령 2차 세계대전 후에 사회 정책에 가장 큰 비중을 뒀던 나라가 독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할 정도로 비중을 뒀던 이유가 동독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안전망 쪽을 해 주지 않으면 정치적인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우리도 지금 독일하고 같은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념적인 갈등도 있고, 북을 지원하면서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망을 강화하지 않고서 어떻게 북을 지원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는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의원**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지출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라는 불멘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셋째, 왜 국민부담이 늘기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험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적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능력은 없으면서 장밋빛 계획만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기획예산처는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으로 8조 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그 중에 3조 2000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확대 재정으로 세 부담과 국가 빚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 1년 만에 2009년도 국가채무계획을 25조 원이나 늘려 잡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도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적자재정 기조에서 균형재정 기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정부는 적자재정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왜 확대재정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리고 서민을 위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내년부터 시행하는 '희망 한국' 계획 중에서 예산의 주요 부분은 보육예산입니다. 주요 부분은 보육예산인데 보육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다음 세대들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선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경제시대에는 물적 SOC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고 전기를 공급하고 댐을 건설하는 것이 사회간접시설 투자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나서 고도의 지적기반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산요소에 대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결국 20년 후에는 생산요소가 약해져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보육을 통해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선행투자를 해 나가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예산 중의 대부분입니다. 상당 부분이 그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을 좀 들여서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서민 세 부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서민들은 직접세를 안 내는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절반 가까이하는 직접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세를 내린다면 서민 세 부담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접세를 안 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세 부담을 내려줄 방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접세를 내려 준다면 50%에 넘는,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49%에 해당되는 분들의 세금을 내려 주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서민이라고 얘기하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간접세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서는 서민들의 세 부담을 내려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정희수 의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간접세를 내리기는 불가능합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간접세를 내린다면 부가세 같은 것을 내려야 되는데—전형적인 것이 부가세 아닙니까— 부가세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대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부가세가 13~15%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만 부가세가 5%지요. 부가세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부가세 부분을 인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세수 감소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1%만 내려도 얼마나 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정희수 의원** 공적 연금의 재정 위기와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립기금은 이미 소진되었고 사학연금은 2026년경, 국민연금은 2047년경에 소진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이미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만 먼저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4대 공적연금의 잠재적 연금 부채는 43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총리, 국민연금만 개혁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포함한 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할 계

획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국민연금처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보험적 성격인 연금하고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처럼 특정 직역에 적용되는 연금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전에 공무원이나 이런 쪽을 고치라는 요구가 가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직업군인들에 대한 연금제도가 없을 경우 우리의 국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그만큼의 여러 가지 희생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연금제라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방 복무에 충실하게 일을 하고, 제대군인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 못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들도 제가 보기에 는 그래도 공무원연금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 많이 없어져서 이제는 공무원 사회가 많이 투명해져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직기간 동안에 뇌물을 받는 것이 더 유익했는데, 유익은 아니지만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금제도가 좋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 부정을 하면 오히려 본인이 손해를 보는 이런 정도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88년도에 설계할 적에 관여했던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연금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강제 저축의 일환으로 당시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납입하면 70%를 줄 수 있다고 하는 허황된 설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결국 파탄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특위에서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이것을 다루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연금개혁특위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수 의원** 공무원연금 때문에 공무원들이 뇌물을 잘 안 받는다는 논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적자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두 배나 더 높게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넷째,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실업 증대로 고용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망실업자와 고용구조를 반영한 체감실업률은 공식실업률의 2배로 추정되고 청년실업률 또한 전체 실업률의 2배인 7.2%입니다. 또한 잠재성장률과 취업계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창출된 일자리는 주로 단기·임시직 형태로 불안정한 일자리만 확산되는 편입니다.

정부 정책은 경제·복지·노동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각 부처별로 수행해 온 정책들을 제시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만 거창할 뿐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 체계 부재로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고 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난해 청년실업 대책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노동부 간 예산은 590억 원, 인원은 1만 2000명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총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실제로 산업사회를 넘어서 IT 기술이 많이 보급되는 이런 사회로 갈수록 일자리 만드는 것이 참 어려운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2만 불 넘어서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값이 싼 일자리에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고 소득이 높은 일자리는 많이 만들기 어렵고 그래서…… 이번 독일 같은 경우도 실업자가 300만에서 500만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슈뢰더 정권이 국민투표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아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군데 남아 있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서비스 분야 쪽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 자리는 비교적 노동의 유연성이 있어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 체계가 더 강화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직종에서 다른 직종으

로 옮길 때 전환하는 유연성이 없는데 평생교육 체계가 이루어지면 직업 전환이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또 지금 정규직이 적고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 자체보다는 차별이 심해지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별만 시정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서구에서 말하는 미니 잡처럼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잡 쉐어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여러 가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더 노력을 해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에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의원** 구체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명퇴자들이 하는 것은 음식점, 아주 영세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생각하시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컨대 서비스 같으면 두 가지만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 위탁되는 어린이들이 전체 어린이들 중에서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약……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아마 한 30%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육시설이 많으면 부모들이 거기에다 맡기고 본인도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보모도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육 체계가 잘 갖추어지면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가령 북한만 해도 보육시설이 3만 5000개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보육시설이 현재 2만 개도 안 됩니다. 인구는 배가 넘는데 보육시설이 북한의 반도 안 되는…… 북한은 보육을 완전히 사회주의적으로 하니까 여성분들이 거의 다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야라든가……

또 노령화사회로 갈수록 제일 필요한 게 일종의 요양을 위한 간호 인력이라든가 간병 인력이라든가 또 재택 방문 간호사라든가 이런 일자리들이 전부 서비스 일자리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면서 일자리…… 서비스 분야는 아직도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희수 의원** 고학력 인력의 서비스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고학력 인력도 서비스 부분이, 가령 이런 거죠.

금융은, 우리는 단순히 대출금융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금융을 잘 하려면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고 시장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금융산업을 위한 다른 보완산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 분야들이 아직은 고도화되지 못했고 또 단순기능 쪽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관련된 보완 서비스 분야가 같이 따라 가는 분야가 많거든요. 교육만 해도 선생님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상담사도 필요하고 심리교사도 필요하고 양호교사도 필요하고 영양사도 필요하고 조리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 그런 요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자리들이거든요.

○**정희수 의원** 현실적으로 매년 쏟아져 나오는 50만 명의 고급인력에 대해서 정부가 매년 40만 개 한다, 거기에만 해도 10만 명의 갭이 생기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정희수 의원** 정책 실패에 의한 경제위기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아전인수식의 경제지표 해석으로 현 위기 상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과 올해 경제성과 지표를 종합 비교해 보면 성장성 안정성 건진성 균형성 고용창출성 등 모든 경제 부분에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 다섯 가지 중병에 걸린 환자의 모습입니다.

국가경제의 심폐기능을 하는 성장잠재력 약화, 서민생활 여건 악화로 인한 화병 심화, 정부재정 건진성 악화로 인한 복부비만 증가, 경제 양극화로 인한 동맹경화, 고용불안의 지속으로 인한 위장장애와 무기력증이 한국 경제가 앓고 있는 중대한 질환들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한국 경제는 심각한 성인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며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장마비나 중풍과 같이 회복 불능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참여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과 이상의 부조화 문제입니다.

둘째, 경제정책의 구체성과 일관성 결여 문제입니다.

셋째, 정책 컨트롤 타워 시스템의 붕괴와 정부 리더십 상실입니다.

향후 정부 경제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우선 앞에 이렇게 2002년보다 더 악화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원인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악화됐다고 하면 신용평가 기관들의 평가가 다 나아지고 있고, 말하자면 국가 경쟁력 평가도 어떻게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의 분석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동의하지도 않고요. 따라서 원인 분석도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재정부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잘 끌어나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경제가 비교적 지금 이렇게 안정된 체계를 갖기까지 지난 2년 반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일관되게 구조조정을 하고 체질 개선을 해서 이제 환율도 안정되어 있고, 금리 물가 이런 부분이 다 안정이 됐고 아까 말한 금융 위기도 이제 사라졌고…… 이렇게 해서 비교적 체질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회복기로 진입을 했습니다.

○**정희수 의원** 우리나라 경제지표 따로 체감지표 따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자세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리께서는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바로 그런 지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총리만 보이고 경제부총리는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항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경제정책을 경제부총리가 이끌어 가시는 데 지원하는 기능을 하지 마이크로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제가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정희수 의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경제조정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쌀 협상 국회 비준이 확정돼 수입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자칫 쌀농사의 기본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인 한국의 농업을 지킬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국민과 농민들 앞에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쌀의 품종 개발과 고급화로 브랜드에 성공하면서 급속한 개방화의 물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한국 쌀의 국제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브랜드화해서 성공했는데 우리도 지금 브랜드화해서 성공하는 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 보니까 지역마다 무슨 쌀 무슨 쌀 해 가지고 40종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포장도 아주 우수하고 미질 관리도 아주 우수해서, 가격도 어떤 경우는 80kg 한 가마니를 기준으로 하면 한 30만원에 가까운 것도 있고 보통 이십몇만 원짜리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RPC를 중심으로 해서 건조와 저장을 잘 하면 미질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급 브랜드를 만들고 또 케이스도 공산품 못지않게 아주 잘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질도 좋고 포장도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개발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쌀 개방이 돼도 능히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한 것을 우리가 왜 못 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희수 의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이 부분은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이런 일종의 농업정책,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 얘기가 있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놀라서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서서히 가열시키면 수온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개구리는 여유롭게 헤엄치다가 자신도 모르게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서서히 악화된 만성적인 경제 질병 속에서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과거사에 얽매이는 등 시대착오적인 사고와 모순으로 허송세월하는 냄비 속의 개구리,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만큼 역동적이고 끈질긴 민족이 없습니다. 전쟁의 참화와 외환위기의 고통을 이겨낸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절망하고 좌절하며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날만 새면 매일 먼 옛날, 쓰레기통을 뒤져 발견한 과거사에 얽매어 대안 없는 공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희태** 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익산갑 한병도 의원입니다.

최근 IMF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OECD 30개국 중 4위 수준인 5%로 전망했고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피치사가 무려 8년 만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도 24일 지난 1/4분기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바닥을 치고 다시 좋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도표는 지난 10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이 4.4%인데 반해 국내 총소득 증가율은 0.2%

에 그쳤습니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산층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은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세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 아니라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공세적 성격이 강합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느냐는 내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심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경기 활성화와 양극화 극복을 위해 감세가 아닌 다른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유류세 10% 인하 없이도 국가의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까지 고유가와 양극화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때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정유사 간 담합 의혹을 해소하고 낮은 고도화설비투자율, 경질유 중심의 원유구조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유사 간 담합 문제를 1년 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아직 조사가 안 끝나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하고 있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병도 의원** 본 의원은 현재 그 담당 인력이 한 명밖에 없어 가지고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석유공사, 석유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공장도가격과 판매가격이 서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국무총리님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드리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시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8시35분 동영상 상영종료)

우선 최근 3년간 국내 4대 정유사의 석유가격을 비교해 보면 공장도가격과 판매가격이 서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공장도가격이 타 사에 비해 가장 높았던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타 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공장도가격이 판매가격으로만 오면 4개 정유사가 동일해 집니다. 또한 각 정유사의 석유제품 판매가를 비교해 보면 SK, GS칼텍스의 판매가가 현대오일뱅크나 S-OIL에 비해 약 10원 정도 비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원의 차이를 자세히 보면 SK와 GS칼텍스는 보너스카드에 포함된 가격일 뿐입니다. 보너스카드 비용을 뺀 경우 4대 정유사의 주유소 판매가격이 묘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합 행위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고요.

총리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가능한 일인지, 동일한 내용이 일정하게 연도와 관계없이 형성되는 것은 의혹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의혹이 보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에 포함시켜서 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시장 상황을 세세히 잘 모르는데 그 상태로 지금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공정위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상황을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의원** 그리고 석유제품의 공장도가격과 판매가격이 서로 연동되지 않고 있음에도 정유사 측은 담합은 절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무관한 주유소의 가격담합으로 물고 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총리께서는 주유소 복수상표제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

다.

○**한병도 의원** 그 복수상표제라는 것이 정유사의 가격담합을 방지하고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2001년 주유소 복수상표제가 도입된 이후의 실적을 보니까 전국이 6건에 불과합니다. 복수상표제가 대단히 미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부의 의지도 약하지만 정유사 측의 유·무형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이 공문이 주유소가 복수상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원적회사가 폴사인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한 공문입니다. 즉 일선 주유소에서 법에 보장된 복수상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다른 상표의 기름을 팔겠다고 하니까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정유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전국 폴사인 현황을 보니까 구성비 이것도 묘하게 변동이 없습니다. 복수상표제를 하고 있는 데요.

그러면서 자영 주유소는 계속 망하고 있는데 반해서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유사가 직영 주유소를 통해 가지고 유통시장은 물론 판매가격까지 결정하는 지금 이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총리님, 본 의원이 현재 상표의무표시제도를 폐지하는 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개정법률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좀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울러 정유사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정부는 국회의 국정조사 활동에는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활동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담합 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국회 조사 활동치고는 어려운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수사에 가까운 자료를 검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개 국회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강제구인하거

나 무슨 서류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담합행위에 관한 조사가 그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 경험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들은 가령 혹시 담합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은폐시키고, 증거를 인멸시키는 그런 수준으로 했을 텐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사하는 성과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좀 낙관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병도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가격담합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정유사들이 기술설비투자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유사들의 주요 수익은 정제마진과 크랙마진에서 나옵니다.

정제마진이라는 것은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 가격과 두바이산 원유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제마진이 2003년도에 ㄹ당 43원이었다가 2004년도에는 2배가 넘는 89원이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정제마진 총액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2003년도에는 6조 원이 증가한 11조 5000억 원이나 됩니다. 정제마진이 지난해와 올해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고수익을 낳는 주요 원천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제마진은 일종의 시세차익으로 특별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정유사 측은 정제마진이 커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원가절감을 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유사 측이 크랙마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랙마진이란 원유보다 싼 중유를 분해해서 휘발유나 경유를 얻는 데서 오는 이익입니다.

따라서 정제시설 고도화율이 높을수록 크랙마진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효율성이 개선되고 정유사의 수익구조도 개선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가격에 고품질의 석유제품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도화율이란 최초 정제 후에 남은 중유를 휘발유나 등유 경유 등으로 만드는 설비보유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OECD 전체 국가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최하위인 22.5%에 불과한 실정으로 2001년부터 계속 정체 상태에 있다가 2004년 들어서야 전년 대비 5% 정도 증가했을

뿐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장관님, 국내 정유사 중에서 중질유 탈황시설을 갖춘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지금 한 2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그리고 중질유 탈황시설이 아예 없는 곳은 일정 정도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고도화율을 산출할 때 중질유 탈황시설은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고도화율을 산출할 때 중질유 탈황시설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 건의를 드리고요. 탈황시설을 포함한 고도화율을 높인다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중질유 도입 비중을 늘려 가지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도화율을 높일 경우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예,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탈황시설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유가로 원유도입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수출이 올해 한 100억 불이 넘습니다. 휘발유나 등유 상태로 수출되는 이런 석유제품이 6대 수출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두바이유가 여러 가지 값이 싼 이유가 유황유가 많은…… 브랜트나 서부텍사스유에 비해 이런 저질유를 들여 와 가지고 높은 탈황시설을 통해 가지고 100억 불 이상 수출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지금 탈황시설 투자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지금 탈황시설, 고도화시설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유를 수출해서 대단히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익을 얻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엄청난 수익구조에 비해서 투자를 좀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14조 원가량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유사가 지금 현재 가

장 이익을 보는 것이 싱가포르 제품하고 두바이산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시장에 넘으로써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현재 정유사가 수익을 얻는 중요한 구조로 보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이익에 비해서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났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투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한 현재 20곳 정도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정유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렇습니다.

지금 정유사들도 앞으로 한 3조 내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황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결들여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한병도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의원** 예.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첫째로는 정유사하고 공장도 가격이 주유소 마진하고 연동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공장도 가격, 공장 입장에서는 재판매가격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 해서는 안 될 불공정행위로 하는 것이 재판매가격의 지정과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여주신 자료에 문서가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정유사가 주유소 가격을 지정해 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복수품 문제에 대해서 저희 산자위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다마는 혹시 의원님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A기업의 주유소에 탱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을 받드시 A기업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탱크에는 A기업으로 해 놓고 풀을 B기업으

로 하겠다 이것은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산자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복수폴을 달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유소 기름도 폴에 해당되는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은 저희들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하고 여수에 주유 탱크가 있는데 여수에서 쓰는 기름이 GS칼텍스인가요? 그 근방의 주유소가 GS칼텍스만 쓰지 않습니다. SK나 현대 이런 주유소들이 GS칼텍스 기름을 다 쓰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마크만 사인만 달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주유소들도 어느 기름이나 다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유업체 간에는 원유를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가제를 집어넣고 회사마다 독특한 제품구조를, 성능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유사는 법상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주유소가 섞어서 파는 것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름의 특성이 모든 기름의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4대 정유사가 이름을 달리 하는 것은 첨가제만 다른 것입니다. 우리 차 기름에 오늘은 SK 쓰고, 그다음 날 오일뱅크 쓴다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일정 정도 어떤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좀 납득이 안 가고, 우월적 지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미 현장에서는요, 주유소들이 현재 도산한 프로티지를 보십시오. 자영업체 주유소는 전부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입증하느냐? 각 대기업의 직영 주유소들이 그것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돈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받는 부분인데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 보시면 우월적 지위도 아까 공문의 단편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공세적인 감세 주장은 분명히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감세 없이도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유사의 가격 담합을 방지한다면 별도의 유류세 인하 없이도 유류세 인하만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한병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총리의 답변 태도라면 국격(國格) 문제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 5분자유발언

(18시50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의원** 한나라당 소속 경북 경주 출신 정종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는 11월 2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착잡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책사업인 방폐장 부지 선정을 경제성이나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마치 인기투표하듯이 주민투표 찬성률만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하고 주민투표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가가 공권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금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한 경북의 경주, 영덕, 포항, 전북 군산은 서로 찬성률을 올리기 위해서 과열과 혼탁, 극심한 지역감정 조장이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배터진 경상도 지금도 배고프냐, 방폐장 양보하라” 또 “경상도 문딩이들에게 이젠 질 수 없다”, “조류독감 옮겨오는 철새 같은 반대세력 경주로 날아가라”는 등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문구들을 사용한 현수막들이 버젓이 시가지에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

것이 그러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입니다.

또 정부 내 특정 세력이 경상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왜곡된 주장이 진실인양 포장되어서 지역 언론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언비어를 담은 전단지도 대량 살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에서는 이런 망국적 불법투표 운동에 항의하기 위해서 경주시장과 국책사업추진단 관계자들이 삭발 단식농성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부채자투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부정투표까지 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들의 지역에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표 시에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찬성표와 섞어서 개표를 하는 경우도 예상되지만 주민투표법상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할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과열을 부추겨 놓고,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하고, 불법투표 운동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표 시의 이러한 부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표 시에 각 지역에 참관인을 교차로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원전이 없는 지역에 방폐장이 간다면 원전을 수십 년간 떠안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물론이고 임시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철거 요구도 빗발칠 것입니다.

또 기존의 원전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역시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2의 불안사태로 변질지도 모르는 방폐장 선정 방법을 재고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정종복 의원 마지막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 의원(264인)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홍일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춘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찬 이해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채 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청가 의원(26인)

강봉균 강혜숙 권오을 김광원  
 김근태 김재원 김정훈 김진표  
 김효석 김희정 박근혜 서병수  
 신계륜 우재창 유승민 윤두환  
 이상민 이재웅 임종석 임해규  
 장윤석 정동채 정몽준 정진섭  
 천정배 최재천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해찬  
 부총리 겸 관장 한덕수  
 부총리 겸 장관 오명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박홍수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이명수  
 건설교통부차관 김용덕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남궁석  
 입법차장 상원종

【보고사항】

○교섭단체 가입

한나라당  
 유승민 윤두환 임해규 정진섭  
 (10월 26일)

○의안 제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  
 표발의)

(2005. 10. 27 박찬숙 · 이명규 · 손봉숙 ·  
 김애실 · 나경원 · 신상진 · 이주호 · 박세환 ·  
 김재원 · 엄호성 · 공성진 · 김태년 · 황우여 ·  
 고조홍 의원 발의)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박찬숙 · 정성호 · 김성곤 ·  
 박재완 · 유기준 · 유정복 · 안상수 · 신상진 ·  
 안병엽 · 김재원 · 엄호성 의원 발의)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손봉숙 · 신중식 · 김효석 ·  
 배일도 · 이정일 · 엄호성 · 김태홍 · 김홍일 ·  
 최인기 · 안상수 · 박계동 · 이낙연 · 김태년 의  
 원 발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손봉숙 의  
 원 대표발의)

(2005. 10. 27 손봉숙 · 신중식 · 김효석 ·  
 배일도 · 이정일 · 엄호성 · 김태홍 · 최인기 ·  
 안상수 · 이낙연 · 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3건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  
 표발의)

(2005. 10. 27 박병석 · 고흥길 · 조성태 ·  
 김재윤 · 김우남 · 이은영 · 김성곤 · 김부겸 ·

오제세 · 김동철 · 윤원호 · 유재건 · 김종률 · 배일도 · 이근식 · 박상돈 · 엄호성 의원 발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 2005. 10. 27 정부 제출)

이상 2건 교육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김성조 · 박재완 · 배일도 · 엄호성 · 윤건영 · 신상진 · 이해봉 · 박세환 · 안상수 · 이계경 · 이상배 · 김재원 의원 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김성조 · 이해훈 · 황우여 · 임인배 · 이명규 · 주성영 · 강재섭 · 이계진 · 이해봉 · 이상배 · 김태환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김성조 · 박재완 · 배일도 · 엄호성 · 윤건영 · 신상진 · 이해봉 · 박세환 · 안상수 · 이계경 · 이상배 · 김재원 의원 발의)

**檢察廳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홍미영 · 김양수 · 정병국 · 홍문표 · 이경숙 · 심재덕 · 김낙성 · 노영민 · 최규식 · 박기춘 · 이호웅 · 이기우 · 김재윤 · 김종률 · 이재오 · 류근찬 · 김광원 · 우제창 · 김태홍 · 우제항 · 정청래 · 선병렬 · 김춘진 · 주승용 · 황진하 · 조경태 · 이인기 · 김덕규 · 김희선 · 노현송 · 임종인 · 김선미 · 안민석 · 박상돈 · 정문헌 · 최철국 · 김영주 · 김영숙 · 안영근 · 장복심 · 정화원 · 윤호중 · 유기홍 · 김명자 · 유승희 · 김영춘 · 노용래 · 한명숙 · 정의화 · 김정훈 · 이재웅 · 김현미 의원 발의)

이상 4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홍미영 · 우제창 · 안민석 · 정화원 · 배기선 · 김종률 · 엄호성 · 서재관 · 이은영 · 김태년 · 안상수 · 고조홍 · 김애실 · 김희선 · 황우여 의원 발의)

**민간공익활동 지원법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홍미영 · 김태홍 · 강혜숙 · 엄호성 · 이계경 · 조성래 · 배일도 · 심재덕 · 김태년 · 유승희 · 이광철 · 문학진 · 이경숙 · 제종길 · 임종석 · 민병두 · 김한길 · 강창일 · 안민석 · 김희선 · 박계동 의원 발의)

**寄附金品募集規制法 폐지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홍미영 · 김태홍 · 강혜숙 · 엄호성 · 이계경 · 조성래 · 배일도 · 심재덕 · 김태년 · 유승희 · 이광철 · 문학진 · 이경숙 · 제종길 · 임종석 · 민병두 · 김한길 · 강창일 · 안민석 · 김희선 · 박계동 의원 발의)

이상 3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 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이시종 · 조일현 · 노영민 · 이은영 · 신중식 · 한광원 · 홍재형 · 박상돈 · 김종률 · 강혜숙 · 강창일 · 서재관 · 안병엽 · 김재원 · 김낙성 의원 발의)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오영식 · 김태홍 · 강길부 · 김태년 · 노영민 · 최철국 · 최규성 · 한병도 · 배기선 · 김교홍 · 김한길 · 서갑원 · 이광재 의원 발의)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구도시재개발 특별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신상진 · 박형준 · 이규택 · 이계경 · 김성조 · 황진하 · 한선교 · 이상득 · 정희수 · 박계동 · 유기준 · 엄호성 · 주호영 · 권영세 · 정병국 · 안상수 · 최연희 · 나경원 · 이진구 · 박승환 의원 발의)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원 제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에 관한 청원**

(2005. 10. 27 강원 원주시 관설동 1313-9 이 우갑으로부터 이계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일본내 조선인마을 우토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청원**

(2005. 10.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 광B/D 6-8층 범무법인 정평/우토로국제대책 회의 상임대표 박연철로부터 김원웅 · 정문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통지**

**국회의원 당선인 통지**

2005. 10. 27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10월 26일 실시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부천시 원미구갑에서 임해규 의원, 광주시에  
서 정진섭 의원, 대구 동구을에서 유승민 의  
원, 울산 북구에서 윤두환 의원이 각각 당선  
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